



2017 프로젝트 <그날들>

정권은 바뀌어도 필수공공기관

\

지금, 여기, 인권이 필요하다





2017프로젝트<그날들>을 떠나며

지난 겨울, 많은 사람이 광장에서 적폐 청산과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며 촛불을 밝혔다. 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고 올해 5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2017년이 그렇게 흘렀다. ‘이명박근혜’ 정권이 아닌 새로운 정권이 촛불 혁명의 힘으로 탄생했으니 변화의 바람이 불 것이고 이미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박근혜가 물러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만큼 우리의 삶에 인권도 더 가까이 다가왔다고 할 수 있는가. 10월 28일 서울 보신각에서 열린 촛불 1주년 인권 쉼기대회의 구호는 ‘인간답게 살아보자’였다. 인권의 눈으로 바라본 한국 사회의 2017년은 어땠을까.

인권이 마주한 날들은 여전히 차갑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모든 사람의 삶이 바뀐 것은 아니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고,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 여론조작과 불법사찰 사태가 폭로되었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은 현실이 있었다. 노조 탄압 중단과 노동자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하늘에 올랐다. 현장 실습이라는 이름으로 모욕적이고 비인간적인 환경에 내몰린 채, 목숨을 잃어야만 했던 청소년노동자들이 있다. 차별과 경쟁의 논리를 넘어서, 노동조합 할 권리를 위해, 안전한 일터를 위해, 비정규직으로 버려지고 착취당하는 노동자가 없는 세상을 위해 우리는 지금도 더 많은 인권을 말해야 하고 변화를 요구해야 하는 이유이다. 평화를 바라며 그저 살던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했던, 사드라는 군사 무기가 배치





되지 않기를 원했던 성주 소성리 주민들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전에는 박근혜 정부의 최대 적폐 중 하나인 사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대통령 당선 후에는, 경찰력을 동원하여 주민들과 활동가들을 쫓아내면서 심야에 사드를 추가 배치했다. 세월호가 인양되고 미수습자 유가족들의 ‘이별식’이 치러졌지만, 아직 세월호에서 내리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 이런 현실들은 촛불 혁명으로 세워진 정부가 곧 평화와 인권과 민주주의인 건 아님을 보여준다. 인권은 저절로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고, 멈춤이나 기다림 없이 우리가 함께 길을 만들며 걸어가는 길 그 자체일 것이다. 2017 프로젝트 ‘그날들’은 바뀐 것 같지만 아직 변하지 않은 일들, 그리고 쫓기고 밀려나는 현장에서 투쟁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했다.

혐오와 차별이 거세지고 있다

우리는 소수자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에 맞서 싸우고 있는 현장들을 기억해야 한다.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비하, 혐오는 오랜 세월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고 있었다. 이에 더해 갈수록 우리의 삶이 각박해지고 사회·경제적 위기감과 무력감이 커지면서 혐오와 차별은 더 노골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특히 여성, 성소수자, 청소년, 이주민 등 소수자들의 평등한 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데 대한 반발로 사회적 혐오의 문제가 더 떠올랐다. 예를 들어 일부 지역에서 학생 인권조례가 만들어지고 차별이 법으로 금지되고 무상급식이 확대되자 청소년에 대한





비하와 적대가 더 활발해지고, 페미니즘 운동이 대중적으로 전개되자 여성 혐오와 페미니즘에 대한 공격이 강해진 것이다. 인권은 모두의 언어인 동시에, 배제되고 나중으로 밀려나는 이들의 언어이기도 하다.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에 맞서 싸운 사건들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선명하게 새겨야 할 인권의 기억이다. 혐오의 목소리에 동조하여 정부가 차별금지법을 국정과제에서 지우고 유력 대선 후보들이 “동성애에 반대한다”고 말할 때, 혐오와 편견에 소수자들의 존재가 깎여나가고 위태로운 살얼음판 위를 걸을 때야말로 인권의 힘이 필요하다. 차별받아도 되는 사람, 함부로 대해도 괜찮은 사람, 나중으로 밀려나도 되는 인권은 없다.

인간다운 삶은 ‘나중’으로 미룰 수 없다.

어제 밥을 먹었으니 오늘은 굶어도 되는가. 내일 행복해질 테니 오늘은 불행해도 되는가. 안타깝게도 무한 경쟁에 치이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삶이 일상인 한국 사회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기도 한다. 하지만 매일매일 돈이 없어서, 시간이 부족해서, 끼니를 대충 때워야만 한다면,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가 사람들의 일상을 지배한다면, 이러한 삶을 과연 인간다운 삶이라 할 수 있을까. 지금 당장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누리기보다는 어떤 모욕과 차별도 참고 견뎌야 ‘일단 생존’할 수 있다는 우리 사회의 정서는, ‘나중’에’를 외치던 사람들의 표정과 닮았다. 기득권과 혐오 세력들의 ‘나중’이라는 구호





는 누구를 향하고 있었나. 결국 ‘나중에’라는 말은 지금 이 사회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을 없는 존재인 셈 치며, 무시하고 차별하는 말과 다르지 않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말에 굴하지 않고 인권과 평등과 민주주의를 쟁취해왔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이 사회의 모든 차별이 사라지고 평등이 실현되는 사회를 바란다. 더는 ‘나중에’라는 말로 차별과 폭력이 정당화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당장 모든 차별받는 사람들에게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오늘을 ‘차별과 혐오의 시대’가 아니라 차별과 혐오에 맞서 싸우고 이를 없애 나간 시대로 만들기 위해 행동하는 날로 기억하자. 모든 사람이 존엄하고 평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날들’을 앞당기기 위해, 인권의 자리를 더 넓히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서 인권을 외친다.





차례

주간인권신문 <인권요름>, 512호를 끝으로 종간하다	10
여성청소년 성토대회	12
서울구치소 과밀수용 위헌 결정	14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16
집회시위 관련 기소 남용에 제동, 용산참사 관련 집시법 등 대법원 무죄 판결	18
유성기업 노동자 괴롭힘 및 인권침해 보고회 열려	20
10년의 외침, 미등록 이주민 단속추방 정책을 멈추어라!	22
나중은 없다, 지금 당장!	24
마음의 관리? 마음의 권리! -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본 청소년 심리지원사업	26
촛불권리선언을 위한 시민대토론	28
삼성 해고노동자 조장희 복직	30
게이바에서 에이즈를 이야기하다 '키싱에이즈샐롱' 진행	32
353일 만에 유성기업 노동자 고 한광호의 장례 치러	34
성소수자 촛불문화제	36
박근혜를 파면한다, 그러나	38
LG유플러스 고객센터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사망사건 진상규명 대책회의 출범 기자회견	40
탄핵이후, 촛불은 사드(THAAD) 저지로!	42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재출범하다	44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500일, 진실과 정의의 밀삭이 나길!	46
"대통령을 하려는 자, 청소년의 삶에 답하라" <2017년도 대선 수권능력시험지> 결과 발표	48
세월호 인양은 인권의 과제	50
국정원 여론조작 부대 '알파팀', 용산참사 여론조작, 불법사찰 드러나	52
우리일터 새로고침 대행진	54
전북도 인권팀장 성폭력 사건 무혐의 처분	56
성소수자 활동가 13인 연행되다	58
노동절, 노동자의 하늘이 무너졌다.	60
청소년 참정권 보장 촉구하는 청소년 집회, 모의 투표 진행	62
투쟁사업장 공투위, 조기대선 다음 날 27일간의 고공단식농성 마무리	64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노동자의 죽음	66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날	68
2017 아이다호 데이(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공동행동 - "새로운 대통령에게 말한다"	70
성소수자 혐오에 반대하는 시민 필리버스킹	
우리의 두려움은 용기가 되어 돌아왔다	72
강정해군기지 반대투쟁 10년	74
“사람 길” 여는 날? “차별 길” 열린 날!	76
문재인정권 출범, 인권운동의 전망과 과제	78
부산경마공원 말관리사의 죽음	80
6.10항쟁 30주년 맞이, 학생인권법 제정 촉구 피켓팅 열어	82
사법부 주인은 국민! 법관 블랙리스트 진상규명하고 법원 적폐 청산하라	84
故백남기 농민의 사인 정정은 진상규명의 시작일 뿐.	86
‘광장을 열자! 백남기를 기억하자! 집시법·경직법 개정 입법청원	88
HIV/AIDS 의료차별의 현실을 알 수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연구결과가 발표되다.	90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위한 변화는 개혁에서 시작돼야 -국가인권위 개혁 촉구 및 개혁과제 전달 기자회견	92
2017 신입 인권활동가 공동교육	94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는 경찰에게 고함	96
군형법제92조의6 폐지, 시민사회 공동의 목표	98
경찰의 인권침해,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우선이다-인정과 책임, 불처벌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과제 토론회	100
인권과 존엄이 기본이 되는 나라를 위한 새 정부 인권과제 제안	102
유엔에이즈, 한국에서 처음으로 HIV 낙인지표조사를 실시하다.	104
한국 진보적 인권운동사의 쟁점들 토론회	106
최저임금, 임금에 대한 우리의 권리를 선언하다	108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 순직 인정된 날	110
차별에 저항한 영상활동가, 고 박종필 감독님의 장례	112
제주생명평화대행진	114





내 삶에 잊을 수 없는 간이역, 꿈 같은 집을 짓다.꿀잠 개소식	116
이주노동자를 더 이상 죽이지 말라. Don't kill anymore! 820 전국이주노동자 결의대회	118
"부러뜨린 각목 휘두르며 협박/감금... 대걸레 부러뜨려 폭행" 이것이 학대가 아니라 생활지도인가	120
손잡고가 손배소 당한 날	122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영정 앞에 국가가 서기까지 5년	124
대법원, 삼성전자 노동자의 희귀질환(다발성경화증) 산업재해 인정 취지로 원심판결 파기 환송	126
로항아인에 대한 폭력에 반대한 날	128
파견법 폐기, 간접고용 철폐 2017 파견노동포럼	130
"빼앗긴 물건은 인권입니다" 서울지역 중고생 소지품 압수 사례조사 발표일	132
차별에 저항하라! 전장연 10주년!	134
사드가 소성리에 추가 배치된 날	136
인권운동 한발 더 내딛기 위한 워크숍	138
#학교에_페미니즘을	140
인권있는 인권단체, 조직 내 민주주의를 위한 운동'을 고민하다	142
과로 사회를 멈추자	144
차별금지법제정촉구서명운동 선포일	146
트럼프가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겠다고 협박한 날	148
카메라 뒤에 사람이 있다.	150
사드배치 위해 <중고CARE팀>앞세운 경찰폭력, 인권위 진정	152
빵은 불법파견과 임금체불로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154
지역에서 퀴어문화축제가 시작되다	156
"청소년도 시민이다!", "2018년부터는 청소년도 투표하자!" 촛불광장의 동료, 청소년인권 보장을 위한 '촛불청소년인권법 제정연대'의 출범	158
우리는 평등한 자를 원한다! 국민주도 헌법개정을 위한 시민대회	160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출범	162
국토 이긱저긱 자유롭게 이동하고 싶은 장애인들의 희망버스 출발하다!	164





삼성은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직업병 피해자 이해정님을 잊지않겠습니다.	166
언론이 조장한 HIV 여성 감염인에 대한 혐오	168
대구 '청소년 노동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공동행동' 발족	170
인권의 가치를 지키자! 충남인권조례를 지키자	172
동양시멘트 노동자, 정규직으로 복직	174
아텍스 저항행동의 날	176
체육대회 대신 쫓기대회 열다	178
유엔 사회권위원회, 강력하고 구체적인 권고들 쏟아내	180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되던 날	182
국립재활원 HIV감염인 재활치료 거부	184
문정현신부의 '반전평화새김전'	186
인권 쫓기대회 '인간답게 살아보자'	188
직장갑질119 출범	190
퀴어 라이브 - 어디에나 있고, 어디든 잇는다.	192
차별금지법 전복공동행동 출범	194
제주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끼임 사고	196
아직 세월호에서 내리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	198
청소년과 기본소득 실험의 만남' 연구 결과 발표회	200
마지막 미수습자 목포신항을 떠나다	202
반올림 10년, 우리는 아직도 거리에 있다. 삼성은 직업병 문제 해결하라!	204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시민평화법정 준비위원회 출범	206
노동할 수 없는 인간은 없다.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하라!	208
나를 위한, 모두를 위한 2017 대학입시거부선언	210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212
대한민국 사형집행중단 20년	214





2016.12.7

주간인권신문 <인권오름>, 512호를 끝으로 종간하다

2006년 온라인 주간인권신문으로 출발한 <인권오름>이 2016년 12월 10여년의 역사를 뒤로 하고 종간했다. 인권오름 이전에 일간팩스신문 <인권하루소식>이 있었다. 93년부터 팩스형태로 매일 발행되며 곳곳에서 일어나는 인권 소식을 전해왔던 <인권하루소식>의 뒤를 이어 <인권오름>은 진보적 인권운동의 담론과 실천을 버리는 동시에 각 영역별로 성장한 인권운동의 힘을 연결하고 연대하기 위해 노력했다. 지난 10여 년의 시기 동안 <인권오름>이 인권매체로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인권오름>을 인권운동의 교류와 연대의 장으로 함께 만들어 온 ‘운동’과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인권오름>은 종간했지만 우리의 이야기를 나눌 ‘매체’와 ‘운동’은 또 다른 곳에서 이미 펼쳐지고 있다.







2016. 12. 17

\
여성청소년 성토대회

여학생들의 치마 길이나 머리 모양, 화장 여부 등은 여전히 학교의 규제 대상이다. 짧은 치마를 입거나 화장을 진하게 하고 가면 여학생들은 교사들로부터 ‘솔집 여자냐’와 같은 말들을 듣는다. 여고와 남고, 여학생 교복(치마)과 남학생 교복(바지) 등으로 나누어진 수많은 학교 제도들은 그 자체로 성별 이분법적이며 사회가 요구하는 여성성과 남성성을 재생산한다. 이에 여성 청소년들이 자신이 경험했던 차별과 폭력에 대해 성토하는 대회가 2016년 12월 17일, 청계광장에서 개최되었다. 추운 날에도 현장에 참여한 많은 여성 청소년들을 비롯해, 현장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 이들 또한 문자와 SNS로 뜨겁게 호응해주었다. 2016년부터 이어진 페미니즘의 리부트 흐름에 여성 청소년들 또한 주체적으로 나서 학교와 사회의 여성 혐오를 고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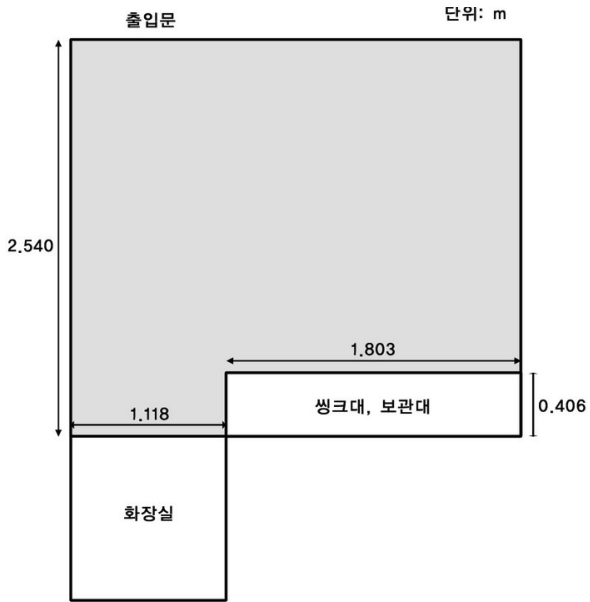


2016. 12. 29

서울구치소 과밀수용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서울구치소 내 과밀수용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1인당 수용면적이 1.06㎡~1.59㎡인 과밀수용에 대해 “(수용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악화되거나 인격체로서의 기본 활동에 필요한 조건을 박탈당하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결정했다. 구금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조치를 제외하고는, 수용자가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기에 적합하고 수용자의 자긍심과 자존감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을 유지하는 생활 조건이 필요하다. 형집행법을 개정하여 1인당 수용면적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는 것을 국가의 의무로 선언해야 한다.







2017. 1. 9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참사 1,000일은 박근혜 퇴진 촛불 속에서 맞았다. 천일이 되도록 인양도, 진상규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아픈 현실을 확인해야 하는 날이었지만, 적어도 방해만 일삼던 정권의 운명이 저물어간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품을 수 있었다. 천일을 이틀 앞둔 1월 7일 11차 범국민행동은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는 제목으로 열렸다. 본집회에 앞서 4.16 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가 발족식을 가졌고 추모콘서트도 열렸다. 특히 이날 본집회에는 세월호 참사의 생존학생들이 처음으로 무대에 올랐다. 생존학생들은 수학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오지 못한 친구들을 그리워하는 편지를 낭독했다. 여전히 책임지는 자 없는 세월호 참사의 무게를 운몸으로 껴안은 생존학생들의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울며 진실을 향한 걸음을 약속했다. 천일이 되는 1월 9일에는 안산에서 추모음악회가 열렸다.







2017. 1. 12

\

집회시위 관련 기소 남용에 제동, 용산참사 관련 집시법 등 대법원 무죄 판결

세월호참사 1,000일은 박근혜 퇴진 촛불 속에서 맞았다. 천일이 되도록 인양도, 진상규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아픈 현실을 확인해야 하는 날이었지만, 적어도 방해만 일삼던 정권의 운명이 저물어간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품을 수 있었다. 천일을 이틀 앞둔 1월 7일 11차 범국민행동은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는 제목으로 열렸다. 본집회에 앞서 4.16 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가 발족식을 가졌고 추모콘서트도 열렸다. 특히 이날 본집회에는 세월호 참사의 생존학생들이 처음으로 무대에 올랐다. 생존학생들은 수학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오지 못한 친구들을 그리워하는 편지를 낭독했다. 여전히 책임지는 자 없는 세월호 참사의 무게를 온몸으로 껴안은 생존학생들의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울며 진실을 향한 걸음을 약속했다. 천일이 되는 1월 9일에는 안산에서 추모음악회가 열렸다.







2017.1.17

유성기업 노동자 괴롭힘 및 인권침해 보고회 열려

2016년 3월 17일 유성기업에서 일하던 금속노조 유성지회 조합원 고(故) 한 광호 님이 괴롭힘과 가학적 노무관리로 목숨을 끊은 후 시민사회가 모여 유성 범대위를 꾸리고 진상조사활동도 했다. ‘유성기업 괴롭힘 및 인권침해 사회적 진상조사단’은 작년 유성기업 괴롭힘 양적 조사, 심층면접, 정신건강 실태와 법적 문제점 분석, 산업재해 인정 분석 등을 포함한 최종보고서를 작성한 보고대회를 2017년 1월 17일 열었다. 회사는 민주노조를 무너뜨리기 위해 일상적이고 지속적으로 조합원들을 괴롭혔을 뿐 아니라 임금 차별과 고소, 기소 등 사법적 수단도 동원했다. 이로 인해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정신건강은 매우 훼손됐다. 이러한 괴롭힘 양상과 영향을 이번 보고회에서 정리하고 괴롭힘을 근절할 정부와 기업의 책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뿐만 아니라 편파적으로 수사과 기소를 일삼는 검찰의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 나누었다.





토론회 유성법대위 | 페이스북 유성기업노동자들과함께
후원계좌 농협 302-0374-1643-41 (정주희)

**유성기업 노동자 괴롭힘 및
인권침해 최종보고 토론회**

01 조사결과 발표
발제1 가학적 노무관리, 괴롭힘 실태와 노동자들의 상태
한인임 (괴롭힘 조사팀, 일과 건강)
발제2 유성지회 노조파괴 법률적 문제점 발표
이서용진 (노무사, 금속노조 법률원)

02 노조파괴 사업장 증언_유성지회/김을토백

03 노조파괴 및 괴롭힘 근절을 위한 해결
가학적 노무관리를 막기 위한 국가의 의무
_ 명숙(인권운동사랑방, 진상조사단장)
직장 내 괴롭힘, 가학적 노무관리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
_ 신경애(한림대 교수)
괴롭힘으로 인한 노동자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
정경희(충남노동인권센터, 두리공방)
유성기업 사례를 통해서 본 원형업체의 부품사 노사관계
개입 제재 방안_ 권영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04 종합토론

**2017년 1월 17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 배움터 10층**

주최_ 유성기업 괴롭힘 및 인권침해 사회적 진상조사단
윤종오의원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
주관_ 유성법대위





2017.2.11

10년의 외침, 미등록 이주민 단속추방 정책을 멈추어라!

2007년 2월 11일 새벽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내 보호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보호외국인 10명이 사망, 18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 화재 발생 후 직원들은 보호외국인들이 도망갈 수도 있다는 이유로 시간을 끌며 문을 열어 주지 않았고 대피하지 못한 이주민들은 매캐한 연기 속에서 목숨을 잃었다. 참사 이후 외국인보호소의 실상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보호’라는 단어만 붙여있을 뿐 실상 ‘구금시설’임이 확인된 것이다. 그들은 형사범죄자가 아님에도 철창으로 차단된 좁은 방에서 열 명 이상이 함께 지내며 외부와의 연락도 차단된 채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한국정부의 미등록 이주민 정책에 대한 민낯이 드러난 것이다. 그후로 10년이 지났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하다. 외국인 보호소의 열악한 상황과 강제추방정책의 폭력적인 집행 과정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한국정부는 더 이상 무고한 이주민들이 목숨을 잃거나 다치지 않도록 폭력적인 강제추방정책을 멈춰야 한다. 이제는 보호없는 외국인보호소 폐쇄하고 모든 미등록 이주민들을 사면해야할 때다. 2월 11일은 돌아가신 이들을 기억하며 국적, 체류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라고 함께 외친 날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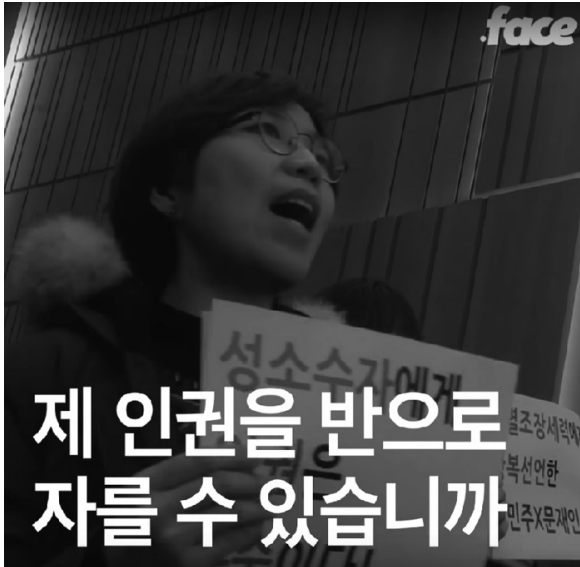


2017.2.16

\
나중은 없다, 지금 당장!

당시 문재인 대선 후보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찾아가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요구하는 목사들에게 “동성애나 동성혼을 위해 추가적인 입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하며 많은 이들의 분노를 샀다. 불과 3일 후, 당시 문 후보는 성평등 포럼에 참석해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처한다. 이에 성소수자 및 시민사회 활동가들은 포럼에 찾아가 항의행동을 펼친다. 그 곳에서 박이경 활동가는 “저는 여성이고 동성애자인데 제 인권을 반으로 자를 수 있습니까?”라고 외친다. 하지만 돌아온 건 “나중에”였다. 당시 상황이 닷페이스 영상을 통해 대중에게 전달되고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리게 된다. 이후 성소수자 운동을 비롯한 각종 시민/사회/인권 운동에서는 “나중은 없다, 지금 당장!”이 슬로건으로 쓰이게 된다.







2017.2.16

\

마음의 관리? 마음의 권리!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본 청소년 심리지원사업

“우리를 환자로 보는 거야?” 심리상담치료를 경험한 청소년이 자주 하는 말이다. 그동안 경험한 상담치료가 모두 최악이라고 말하는 청소년도 있다. 청소년으로 하여금 심리정서지원으로부터 달아나게 만드는 건 뭘까? ‘인권교육센터 들’은 학교나 청소년 위기지원 현장에 넘쳐나는 심리정서지원사업이 청소년에게 어떻게 경험되고 있는지 탐색하기로 했다.

이 연구를 통해 청소년이 겪는 고통을 이해하고 회복을 지원하려는 치유작업 역시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억압에 반대하는 운동과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자존감의 바닥을 헤매고 있는 청소년들이 있다면, 그/녀들에게 자기를 구원할 힘은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지만 오롯이 자기만의 몫은 아님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심리적 지지와 해방을 도울 더 많은 ‘언어’가 필요하다.







2017.2.18

촛불권리선언을 위한 시민대토론

<촛불권리선언을 위한 시민대토론> ‘2017 대한민국, 꽃길을 부탁해’가 2월 18일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의 주최로 장충체육관에서 열렸다. 주말마다 광장을 가득 메워온 1,000만 촛불의 의미를 되새기고, 앞으로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 뜻을 모아 촛불을 이끌어온 시민의 이름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선언하자는 취지로 기획되었다. 10대부터 70대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2,000여명의 시민들이 토론회의 취지에 공감하여 참여했다. 토론에 참석한 시민들은 7~8명씩 테이블에 둘러앉아 각자 자신의 입장에서 촛불의 의미를 되짚으며 모두의 삶이 달라지기 위해 필요한 개혁의 방향과 정신을 제시했다. 더불어 △재벌체제개혁 △공안통치기구개혁 △정치·선거제도개혁 △좋은 일자리와 노동기본권 △사회복지·공공성 및 생존권 △성평등과 사회적 소수자 권리 △남북관계와 외교안보 정책 개혁 △위험사회 구조개혁 △교육불평등 개혁·교육공공성 강화 △언론개혁과 자유권 등의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촛불개혁과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아냈다.

이후 토론에 참석했던 시민들 중에서 추천된 60여 명의 위원들로 ‘촛불권리선언 성안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성안위원회는 대토론에서 나온 시민들의 의견들을 3차례에 걸쳐 면밀히 검토한 후 ‘촛불권리선언 초안’을 작성했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7 촛불권리선언문’을 완성했다.

‘2017 촛불권리선언’은 박근혜에 대한 현재의 탄핵결정 직후인 3월 11일 촛불 승리를 위한 20차 범국민행동의 날 촛불광장에서 발표되었다.







2017.3.2

\

삼성 해고노동자 조장희 복직

삼성 에버랜드에서 일하는 조장희씨는 2011년 7월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그후 5년 8개월 동안 복직을 포기하지 않고 싸운 결과, 2016년 12월 29일 대법원에서 해고 무효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서 2017년 3월 2일 원래 일하던 에버랜드로 돌아갈 수 있었다. 조장희씨는 삼성의 무노조 노동 탄압의 산 증인이었다. 그리고 삼성의 무노조 80년 역사에서 최초로 현장으로 돌아간 노동자가 됐다. 그동안 삼성에서 노동조합을 만들다 해고당한 노동자들은 여럿 있었지만, 법원에서 패소하기도 하고, 삼성의 탄압에 복직을 포기하기도 하고, 삼성의 회유에 매수당한 사람도 있었다. 이렇게 완전히 승리하고 현장으로 돌아간 경우는 조장희씨가 최초였다.







2017. 3. 4

게이바에서 에이즈를 이야기하다 ‘키싱에이즈쌀롱’ 진행

HIV 감염인 자조모임과 HIV/AIDS 인권단체,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이 지난해 12월 결성한 ‘HIV/AIDS 인권활동가 네트워크’는 성소수자 커뮤니티 내에서 에이즈 이슈를 적극적으로 다루고, HIV 감염인과 거리를 좁히며 다양한 HIV/AIDS 관련 정보를 얻고자 하는 취지로 인권재단 사람의 지원을 받아 오픈 토크 ‘키싱에이즈쌀롱’을 3월부터 12월까지 매월 한 번씩 진행했다. 종로의 게이 술집에서 진행된 행사는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에이즈에 대해 더 친숙하게 말하기, 더 많이 알기, 감염인과 함께 살기, 적극적으로 알리기 등 네 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 기획되었다. 찢러보기, 만져보기, 쓰다듬기, 깨물기, 속삭이기, 삼키기, 느끼기, 분출하기 등 매회 스킨십 용어를 카피로 넣은 키싱에이즈쌀롱은 HIV/AIDS를 둘러싼 섹스, 연애, 낙인과 혐오, 전파매개행위금지조항, 예방 등 전반적인 이슈들을 다뤘다.







2017.3.4

353일 만에 유성기업 노동자故 한광호의 장례 치러

회사의 노조탄압으로 목숨을 잃은 유성기업 노동자故 한광호의 장례식이 3월 4일 치러졌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353일 만이다. 그가 죽어야 했던 이유는 헌법에도 보장된 권리인 노동조합에 가입해 대의원으로 활동했다는 사실 때문이다. 아직 현장에서의 괴롭힘이나 노조탄압을 여전하다.

2월 17일에는 유성기업 유시영회장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그나마 장례가 치러질 수 있었던 이유다. 유시영의 구속은 미약하나마 노조파괴 범죄자에 대한 사법정의를 보여주고 책임자 처벌이다. 더욱이 원청인 현대차 재벌이 유성기업 노조파괴에 개입했다는 것이 판결문에 명시됐다.

노동현장에서 권리 행사가 탄압의 원인이 되는 현실은 바뀌어야 한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처절한 투쟁으로 노조파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진 괴롭힘과 인권침해의 심각성이 사회에 알려졌다. 장례를 치르면서 사람들은 현대차의 노조파괴 개입에 대한 처벌을 다짐했다.







2017.3.10

성소수자 촛불문화제

박근혜가 탄핵되던 역사적인 순간, 광화문광장 캠퍼촌 무대에서 ‘성소수자차별 반대 무지개행동’의 주최로 <성소수자 촛불문화제 - 박근혜 탄핵! 이제, 성소수자 평등한 사회로> (3/10) 가 열렸다. 박근혜 탄핵 인용을 환영하고, 성소수자 평등한 사회의 시작을 다짐하는 자리였다. 하지만 이어진 대선 기간 동안, 대선 후보들은 연이어 성소수자의 인권 보장을 합의되지 않았다고, 시기상조라며 유예했다. 이에 장미 대선을 앞두고 <불금의 약속! 성소수자 촛불문화제 - 대통령 후보들은 평등을 약속하라!> (3/31, 4/7, 4/14) 를 매주 금요일 세 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위한 변화의 요구를 표출했다. 지난 광장의 외침 속에는 성소수자들도 존재했으며, 성소수자의 인권은 합의의 대상도, 시기상조의 이슈도 아니라는 메시지를 사회에 전달했다.







2017.3.10

\
박근혜를 파면한다, 그러나

온 국민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생중계로 지켜보는 날이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많은 사람들이 애타게 기다리던 결정이 내려졌고 박근혜 퇴진 촛불은 민주주의를 향한 한 고비를 넘었다. 2016년 12월 9일 국회는 당시 대통령이던 박근혜의 탄핵안을 가결했다. 탄핵사유에는 최서원(최순실)의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에 관한 것뿐 아니라 여러 위헌·위법 행위가 제기되었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의 행위가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련의 언행에서 헌법수호의지도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파면을 선고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세월호 참사 관련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은 아니라고 결정했다.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죽인 국가가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사회에서 생명이 권리라고 말할 수 있을까? 박근혜 파면 결정은 인권에 대한 국가 의무를 확립하는 데에 큰 과제를 확인시킨 결정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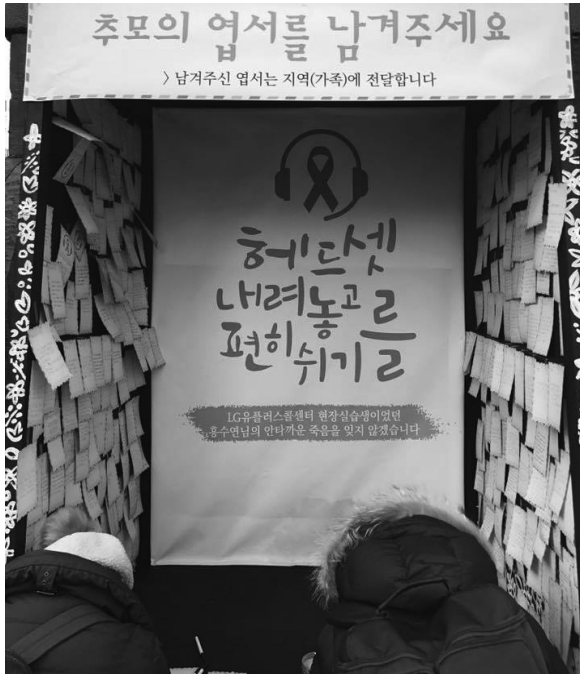
2017.3.13

\

LG유플러스 고객센터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사망사건 진상규명 대책회의 출범 기자회견

2017년 1월 23일 전주 LG유플러스 고객센터(LB휴넷)에서 일하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현장실습’이지만 전공과 아무 관련 없는 통신회사 콜센터에서, 현장실습표준협약서와 다른 근로계약 아래 일하던 중이었다. 그런데도 현장실습에 책임이 있는 학교와 교육청은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 11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LG유플러스 고객센터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사망사건 진상규명 대책회의를 구성하여,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함께 추모하며, 교육도 노동도 아닌 특성화고 현장실습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대책회의는 전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추모제, 전국 교육청과 회사 앞 1인 시위, 특성화고 재학생·졸업생 권리선언 등을 벌여 회사로부터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받아냈다.







2017.3.18

\
탄핵이후, 촛불은 사드(THAAD) 저지로!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일주일 뒤 우리는 성주 소성리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다. 박근혜의 대통령으로서의 권한과 직무는 이미 몇 개월 전에 정지됐지만 황교안 권한대행체제에서도 쉬지 않고 추진됐던 사드(THAAD) 배치를 막기 위해서였다. 사드 배치는 요격미사일 몇 기를 들이는 문제가 아닌 미국, 중국, 북한, 일본이 국가안보를 내세우며 참여하게 대립하는 사안이었던만큼 정부관료와 군인 몇 명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었다. 정부의 일방적인 사드 배치에 삶의 터전이 짓밟히는 소성리는 한국사회의 축소판이었다. 3월 18일 소성리 평화버스는 2017년 계속될 사드배치반대 투쟁의 시작이었다.







2017.3.23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재출범하다

2017년 3월 23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재출범을 선언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인권기본법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과 반차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평등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연대체이다. 2010년 결성된 이후 국회 및 정부의 차별금지법 발의 대응, 대중캠페인과 1인시위, 이슈토론회 등 활동을 이어나가다가 2015년 잠정적인 휴지기에 들어섰다. 2017년 탄핵 이후 인권과 평등의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다시 활동을 재가동하였다. 문재인 정부와 20대 국회가 평등을 향한 열망에 응답하기를 촉구하며 서명운동, 지역순회 간담회, 소책자 발간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재출범 당시 100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였으며, 2017년 12월 현재 115개의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하고 있다.







2017.3.27

\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500일, 진실과 정의의 밀싹이 나길!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쓰러지신 2015년 11월 14일 그날로부터 어느덧 500일,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등 7명을 살인미수 혐의로 고발했지만 그동안 검찰 수사는 진전이 없었다. 국가폭력으로 인한 죽음이 명백했지만, 아무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다. 백남기 농민에게 가해진 국가폭력 500일을 맞아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500일 주간행동을 펼쳤다. ‘광장을 열자! 백남기를 기억하자’ 입법청원 캠페인을 하고, 진실과 정의를 요구하는 시민들과 함께 걸개그림을 만들고, 한 달간 중앙지검 앞에서 국가폭력 책임자 수사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갔다. 그리고 지난 10월에서야 검찰은 ‘강신명 무혐의, 구은수 등 불구속 기소’로 수사를 일단락 지었다. 고발장 접수 이후 700일이 걸려 나온 결과였다. 이같은 국가폭력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야 할 길은 여전히 멀다. 이후 진행상황을 계속 주목해야 할 이유다.







2017.3.31

\

"대통령을 하려는 자, 청소년의 삶에 답하라" <2017년도 대선 수권능력시험지> 결과 발표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자들에게 '2017년도 대선 수권능력시험'이라는 제목으로 시험지 형태의 질의서를 보내서 청소년인권에 대한 기초적인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홍준표, 유승민, 남경필 후보는 답하지 않았고 그 외 후보는 답신을 해왔다. 많은 대선 후보들이 학습시간 축소, 체벌 근절, 참정권 확대 등 청소년인권 보장에 대해 동의 의사를 표해서 변화의 희망을 볼 수 있었다. 실질적인 '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소년들이 처한 현실과 청소년들이 살아가는 삶에는 무관심한 정치인들이 많다. 이에 <2017년도 대선 수권능력시험지>의 질문에 답을 보내달라고 한 것은, 특히 선거 운동 기간에는 묻히기 쉬운 청소년들의 요구를 드러내기 위함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청소년 참정권 보장은 우리 사회의 인권 감수성을 더 확대하고 한 걸음 나아가는 데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우리들의 목소리, 참고만 하지 말고 반영해달라!" 라는 한 청소년의 이야기를 우리 사회는 되새겨야 한다.





“대통령을 하려는 자, 청소년의 삶에 답하라”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대선 후보들에게 시험문제 내



학생인권법 제정·청소년인권 정책 도입
후보들 압도적 지지
청소년 참정권 확대, 학교폭력법 개정,
학생인권법 제정 등 대선 정책임이 확인돼





2017.3.31

\\
세월호 인양은 인권의 과제

세월호가 목포신항에 닿은 3월 31일 인권단체들은 ‘세월호 인양의 전 과정에
서 피해자 인권 보장을 촉구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2014년 11월 수색 종
료 이후 시간만 끌던 정부의 태도는 2015년 4월 16일 인양 결정 이후에도 한결
같았다. 우연이라기에는 허탈할 정도로, 박근혜 파면 결정이 있는 후 세월호 선
체가 본격적으로 인양되기 시작했다. 3월 22일 시험인양을 거쳐 본인양이 시
작되고 다음날 세월호 선체는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박근혜가 구속된 3
월 31일, 금요일엔 돌아오라던 기도에 바다는 세월호를 물으로 돌려보냈다. 인
권단체들은 2014년 6월부터 시작된 ‘기다림의 버스’를 비롯하여 다양한 활동들
에 함께 하며 선체 인양과 미수습자 수습을 위해 힘을 모아왔다. 인권단체들은
인양과 관련해 정부가 보였던 태도를 ‘묵살, 불투명, 졸속’이라 지적하며, △수
습, 조사, 보존이라는 세월호 인양의 목표를 망각하지 말 것, △시신 수습과 인
도 과정에서 인권을 존중할 것, △인양 과정에 피해자 가족 참여를 보장할 것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세월호는 3주기를 앞둔 4월 11일 육상에 거치되면서 인
양이 완료되었다.







2017.4.10

\

국정원 여론조작 부대 ‘알파팀’, 용산참사 여론조작, 불법사찰 드러나

이명박정권에서 국정원이 광우병 촛불이후 우익 청년단 등 민간인으로 구성된 여론조작 부대 알파팀을 구성해 관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이들이 2009년 온라인상에 집중 유포한 용산참사 관련 비방 글의 원 작성자가 당시 청와대 행정관인 것으로 밝혀져 청와대의 용산참사 여론조작 관여가 또다시 드러났다. 2009년 당시에도 “용산참사 무마용으로 강호순 연쇄살인사건을 적극 활용하라”는 청와대 지시 문건이 폭로된 바 있다.

이들은 온라인 여론조작에 그치지 않고 민간인을 동원한 불법 채증과 사찰까지 자행한 정황이 드러났다. 국정원 직원들은 개인용 촬영장비를 나눠주고 용산참사 집회 현장의 동영상 촬영을 지시하고 수고비를 지급했다고 한다. 국가기관이 비선조직까지 동원해 여론조작과 불법사찰을 일삼은 것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이며 사상초유의 탄핵과 구속으로 이어진 박근혜의 국정농단과 연장선상에 있다.







2017.4.22

우리일터 새로고침 대행진

모두가 청와대 주인이 누가 될지에 관심을 쏟고 있던 4월11일, 현대미포조선 비정규직 해고노동자 2명이 울산 현대중공업 앞 20미터 높이의 고가도로 난간에 올랐다. 사흘 뒤인 4월14일에는 광화문 네거리 30미터 광고탑에 6명의 비정규직, 장기투쟁, 해고노동자들이 올라가 '고공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4월 22일 비정규노동자 2000여 명이 모여 "대통령이 바뀐다고 내 일터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며 대학로에서 광화문까지 걸었다. 청소·하청 비정규 노동자 수천명도 이날 함께 행진하며 "박근혜가 구속돼도 우리 일터에는 아직 불이 오지 않았다. 고장 난 더러운 세상을 우리 손으로 고치고 청소하겠다"고 외쳤다. 추모의 길, 비정규직 철폐의 길, 연대의 길을 걷자고 행진을 제안한 이들은 광장에 모여 촛불을 들었던 '시민'이었고, 광화문 광장에 텐트 하나 쳐놓고, 한 파를 견뎠던 '광화문 텐트촌'의 촌민들이었다. 그리고 이들은 여전히 일터에서, 거리에서 촛불을 밝힌다.







2017.4.24



전북도 인권팀장 성폭력 사건 무혐의 처분

전북도청 인권팀장의 성폭력 사건은 2016년 12월에 발생했다. 이 사건은 그 해 전주인권영화제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에게 가해자가 지역사회 내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준다고 하면서 모텔로 데리고 가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이다. 그러나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는 성폭력 원인 제공자가 술을 마신 피해자고,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 가해자를 유혹하는 행동일 것이라는 잘못된 성폭력의 통념이 전제되어 있었다. 그러나 성폭력 수사는 성별권력, 나이, 사회적 지위 등의 권력관계와 전후 맥락이 고려되어 신중히 진행되어야 한다. 지역단체들은 무혐의 처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4월 27일에 진행했고, 피해자는 재정신청을 한 상황이다.







2017.4.26

성소수자 활동가 13인 연행되다

4월 25일 대선후보 TV토론에서 후보간에 동성애 찬반을 묻는 경악할만한 상황이 벌어졌다.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순간은 적폐청산을 강조하던 당시 문재인 후보가 “동성애 반대”라고 발언했을 때다. 수많은 성소수자들이 상처입고 절망을 느꼈다. 이미 지난 2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해 비판 받은 바 있었으나, 전국민의 시선이 집중된 대선 토론 생방송에서 “동성애 반대” 발언은 훨씬 더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일이었다.

여러 단체의 성소수자 활동가들은 4월 26일 오전 문재인 후보에게 찾아가 혐오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문재인 후보는 성소수자 활동가들의 외침을 묵살하고 자리를 떴고 항의행동을 마치고 돌아가려는 활동가들 13인은 폭력적으로 연행됐다. 성소수자 인권을 요구하는 활동 과정에서 벌어진 초유의 연행 사태였다. 무지개행동은 즉각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었고 분노한 사람들 400여 명이 모여 연행자 석방을 촉구했다.

문재인 후보는 다음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성소수자의 존재는 찬성과 반대의 문제가 아닙니다”라고 밝혔지만 자신의 발언이 “군대 내 동성애에 대한 반대를 표명한 것”이라는 단서를 달아 모순과 한계를 드러냈다. 이 사건은 혐오에 사로잡힌 주류 정치권의 한계를 드러낸 한편 성소수자 인권 의제를 대선 이슈로 급부상시키며 사회적 논의를 확대했다.







2017.5.1

노동절, 노동자의 하늘이 무너졌다.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골리앗크레인과 지브형 타워크레인이 충돌했다. 이 사고로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다쳤다. 삼성중공업 박대영 사장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크레인 신호수 노동자 한 명이 오히려 구속되었다. 크레인에는 충돌 방지장치, 충돌 경고장치조차 없었다. 노동부는 삼성중공업에 대해 총 866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 조치했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위험한 혼재 작업에, 공기압박에,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없이 노동현장에 내몰리고 있다. 사고 현장에 함께 있던 노동자들은 죽은 동료에 대한 죄책감, 크레인의 두려움, 정신적 트라우마로 일터를 떠나고 있고, 사고로 인해 일하지 못한 기간의 휴업급여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 왜 이 모든 고통을 오롯이 노동자가 감내해야 하는 것일까.







2017.5.9

\

청소년 참정권 보장 촉구하는 청소년 집회, 모의 투표 진행

2017년 5월 9일, '촛불 대선'이라고 불리며 어느 때보다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졌던 날이지만 청소년에게는 '강 건너 불구경'과 다름 없었다. 청소년은 현재 공직선거법 상 투표를 할 수 없고, 선거 운동을 하거나 정당에 가입을 할 수도 없다. 박근혜 탄핵 집회에서는 함께 촛불을 들었지만 선거장에는 함께 들어갈 수 없었던 청소년들이 종로에서 집회를 열고 청소년 참정권을 주장했다. 200명이 넘는 참여자들은 청계천과 종로 일대를 행진했다. 이른바 '비(非)시민' 취급을 받는 청소년들의 삶을 바꾸자고, 청소년도 인간답게 살아보자고 외치는 자리였다.







2017.5.10

\
**투쟁사업장 공투위, 조기대선 다음 날
27일간의 고공단식농성 마무리**

대선을 마치고 새로 선출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던 5월 10일, ‘정리 해고·비정규직 철폐, 노동3권 쟁취’를 걸고 4월 14일 광화문 사거리 광고탑에 오른 투쟁사업장 공동투쟁위원회 노동자들의 고공단식농성이 27일 만에 끝났다. 건강 악화로 농성 22일 되는 날인 5월 5일에 먼저 병원으로 후송된 이인근 콜텍지회장을 제외한 5인의 노동자들은 바로 녹색병원으로 옮겨졌다. 5월 10일 오후 1시, 고공의 노동자들이 내려오기 전에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공투위 공동대표인 차천호 아사히비정규직지회장은 “조기 대선을 이끈 노동자·민중의 목소리를 대선후보들이 경청할 것이라는 생각에 비정규직 문제를 요구하며 하늘에 올랐지만 유력후보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공단식투쟁을 결의했던 그 마음으로 땅에서 더 많은 노동자들과 함께 싸우겠다.”고 밝혔다.







2017.5.12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노동자의 죽음

2017년 5월 12일 문재인대통령은 취임 후 첫 현장일정으로 인천공항을 찾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정부는 가이드 라인을 통해 정규직 전환을 각 기관에 떠맡겼고, 기관별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나 정규직 전환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했지만, 노동자들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대상을 축소시키는 논의만 진행되었다. 노동자들 사이의 갈등도 증폭되었다. 기간제교사는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후 오히려 폭언과 혐오표현에 시달렸다. 인천공항 정규직들은 ‘정규직전환 제로’를 요구하며 비정규직을 조롱했다. 급기야 서울지하철에서는 이런 상황을 견디지 못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정부는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에 제대로 답해야할 정책을 이벤트로 만들고 현장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2017.5.15

\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날

5월 15일은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War Resisters' International)에서 지정한 세계병역거부자의 날로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군대에 저항하는 병역거부자들의 저항을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와 캠페인이 열린다. 한국은 2003년부터 한국과 세계의 병역거부자들의 상황을 알렸고 올해에는 헌법재판소의 조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촉구하는 의미를 담아 헌재에서 국회까지 자전거 행진을 했다. 또한 5월 15일 당일에는 수십명의 출소한 병역거부자들이 감옥 퍼포먼스를 펼치며 기자회견을 했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관계자들은 대체복무 도입에 찬성 입장을 밝혀왔지만 여전히 대체복무제 도입 논의는 지지부진하고 병역거부자들은 감옥에 가고 있다. 한편 2015년 이후 사법부에서는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판결이 급증하였고 올해에만 36건의 무죄판결이 나왔다.







2017.5.17

2017아이다호 데이(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공동행동 - "새로운 대통령에게 말한다"
 성소수자 혐오에 반대하는 시민 필리버스킹

1990년 5월 17일 국제보건기구[WHO]는 동성애 및 트랜스젠더는 질병이 아
 님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이 날을 기리기 위해 '아이다호 데이'(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로 명명하며, 세계 곳곳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에 맞
 선 크고 작은 활동들을 벌이고 있다.

2017년 5월 17일 한국에서도 서울 파이낸셜 센터 앞에 약 300여명의 성소수
 자들과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여 성소수자 차별 철폐
 를 외치는 아이다호 기념 행사, "새로운 대통령에게 말한다 - 성소수자 혐오에
 반대하는 시민 필리버스킹"을 진행했다. 성소수자의 인권이 대선 주요 토론 거
 리가 될만큼 존재는 가시화 되었지만, 성소수자 군인은 악법인 군형법 92조의
 6에 의해 징역 2년을 구형받고, 학교에서는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짓밟는 성교
 육 표준안이 나올만큼 혐오와 차별이 넘치는 2017년. 바로 그렇기에 성소수자
 들이 모여 함께 슬퍼하고 분노하며 새로운 대통령에게 당당하게 우리들의 권
 리를 요구 했다. 그리고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에 반대하는 노동, 장애, 여성 등
 각기 각층의 사람들이 지지와 연대의 말을 전했다.







2017.5.17

\
우리의 두려움은 용기가 되어 돌아왔다

2016년 5월 17일, 강남역 인근에서 한 여성이 살해당했다. 살해 동기를 묻는 질문에 범인은 “여자들이 나를 괴롭히고 무시했다.”라고 답했다. 범인이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었다는 사실에 비추어봤을 때, 여성으로 보인다면 누구든 이 사건의 피해자가 될 수 있었다. 이에 수많은 여성들이 이 사건을 여성혐오범죄로 명명하며 분개했다. 살인·강도와 같은 흉악범죄의 피해자 10명 중 9명이 여성인 현실과 여성으로서 겪어왔던 폭력 경험에 비추어 여성에 대한 차별과 멸시가 팽배한 사회가 이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이었음을 알린 것이다. 전국이 포스트잇 추모 물결로 일렁였던 2016년을 지나 올해인 2017년 5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여성혐오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수많은 페미니스트들이 다시금 강남역을 비롯해 부산, 대구 등 전국의 각 지역에서 모였다. 국가가 아직도 혐오범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남녀화장실 분리와 같은 미봉책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현재까지도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혐오발화와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였다. 현실을 바로 보고,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모인 우리는 ‘생각하고 설치고 말하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1주기 추모제의 제목 그대로, ‘우리의 두려움은 용기가 되어 돌아왔다.’







2017.5.18

강정해군기지 반대투쟁 10년

2007년 4월 26일 해군기지 유치신청이 단 87명의 사람들만 모여 진행된 것에 분노한 강정 주민들이 5월 18일 강정해군기지방대대책위를 만들고 해군기지에 맞서 생명평화강정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시작했다. 어느덧 10년, 강정 주민들은 마음의 고향인 구름비 바위를 잃는 것도 모자라 해군기지 찬성과 반대로 공동체가 나뉘는 고통을 겪었다. 폭력적으로 강행된 국책사업에 맞섰다는 이유로 강정 주민과 평화활동가 약 700명이 연행되었고, 600명이 감옥에 수감되었으며, 벌금 액수만도 3억 원에 이른다. 생명평화의 가치를 지키려 했다는 이유로 해군과 정부는 34억5천만 원의 구상권을 청구했다. 작년 2월 해군기지 준공 이후 미국의 전략 무기들이 배치되어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것이라는 염려는 현실화되었다. 11월 22일에는 첫 핵잠수함이 강정에 입항했다. 우려가 현실로 변화되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싸움을 멈출 수 없는 이유이다. 제주를 군사기지 없는 섬으로, 강정을 생명평화의 마을로 지켜나가기 위한 우리의 투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란 각오를 다진다.





강정해군기지 반대투쟁 10년!

공감비

기억 행동

2017.5.12 - 5.19





2017.5.20

“사람 길” 여는 날? “차별 길” 열린 날!

5월 20일, 서울역 서부와 남대문시장을 잇는 ‘서울로 7017’이 개장되었다. “차량 길”을 “사람 길”로, “사람 중심 도시재생”을 시작하겠다는 서울시의 포부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가 모델로 삼은 뉴욕의 하이라인 파크가 주변의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켜 주민들을 내몰았듯, 서울로는 홈리스와 가난한 이들을 “사람”에서 배제시키려 하였다. 서울시가 발의한 「서울로 7017 조례안」이 “눅는 행위, 노숙행위 및 구걸행위 등 통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제한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행위”를 제한하는 외형을 빌어 홈리스와 가난한 이들을 배제하려는 의도다. 시의회 상임위 방청을 통해 안 일이지만, 이 조항은 경찰이 서울시에 강하게 요구해서 들어가게 된 것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조례안은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역시 제한하도록 하였다. 홈리스의 서울로 이용을 차단할 장치를 겹겹이 늘어놓은 것이다. 홈리스행동과 인권사회단체들의 대응으로 노숙행위를 제한하는 조항은 삭제되었다. 그러나 소음과 악취 등을 제한하는 조항은 남아, 홈리스의 서울로 이용제한은 얼마든 가능한 상태다. “사람 길”이 열리니 차별이 확대되는 역설, 서울로를 걸을 때 염두 할 일이다.







2017.5.23

문재인정권 출범, 인권운동의 전망과 과제

2016년 겨울, 국정농단 사건에 분노한 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왔다. '이게 나라냐'라는 구호는 좀 더 살만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질문이었다. 결국 박근혜는 탄핵되고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하지만 광장에서 울려 퍼진 목소리, 다양한 이들의 삶을 반영하지 못하는 정치는 여전히 고인물 일 수 밖에 없다. 인권운동+는 광장에서 울려 퍼진 이야기들을 기억하고, 새로운 정권에서 인권운동의 전망을 고민해나가기 위해서 토론회를 진행했다. 여전히 멈춰서 있는 차별과 평화의 이야기를 포함하여 인권운동의 전망과 과제를 그려나가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인권회의에서 인권운동+로 단체를 재정비 하면서 진행된 첫번째 행사로서의 의미도 있었다. 인권단체들의 연대와 이후 인권운동의 방향을 고민하며 인권운동+가 새롭게 출범하였다. 새로운 시기 인권운동의 전망을 잡아가면서 인권운동+로서 열심히 활동하겠다는 다짐의 의미도 있는 토론회였다.







2017.5.27

부산경마공원 말관리사의 죽음

5월 27일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 말관리사로 일하던 박경근님이, 8월 1일에는 이현준님도 스스로 목숨을 버렸다. 마사회는 경쟁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경주 성적에 따라 임금이 배분되도록 만들었고 그 때문에 하위성적을 내는 마방에서 일하는 말관리사는 열심히 일하고도 생계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산재의 위험도 높았고 고용불안과 임금불안으로 스트레스도 매우 높았다. 그러나 마사회는 사용자로서 책임은 지지 않은 채 ‘경쟁’만을 외치면서 노동자들을 죽음의 경쟁으로 내몰았다. 이 죽음 이후 노동자들은 투쟁을 시작했고, 그 결과 8월 16일 직접고용 구조개선 협의체 구성과 고용안정, 노조활동 보장에 합의했다. 가장 열악한 조건의 노동자들이 경쟁에 내몰리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2017. 6. 10

\

6.10항쟁 30주년 맞이, 학생인권법 제정 촉구 피켓팅 열어

2017년 6월 10일은 6.10민주항쟁 30주년이 되는 날이다.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너머본부') 소속 활동가들은 기념식이 열리는 현장에서 피켓팅을 열었다.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기 전, '너머본부'에서 대통령 후보들에게 보낸 <대선 수권(受權)능력시험>에 대한 답변서를 보냈고 당시 문재인 후보는 학생인권법 제정의 필요성에 동의 의사를 표하고, '학생인권법을 임기 초반에 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하는 행사에서 학생인권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행동을 진행했다. 피켓팅 도중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주요 요구사항을 전달할 수 있었다.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법률 제정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최선을 다할지 계속 지켜보고 요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민주주의의 기본인 학생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청소년운동은 계속 될 것이다.







2017. 6. 14

사법부 주인은 국민! 법관 블랙리스트 진상규명하고
법원 적폐 청산하라

2017년 2월 언론을 통해 대법원이 판사들의 성향을 분류 관리하는 소위 “법관 블랙리스트”가 있다고 폭로됐다. 대법원은 이인복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내부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를 했지만 블랙리스트가 보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컴퓨터는 조사하지 않고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성급히 결론지었다.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연석회의)는 이번 사태의 원인은 인사권을 독점한 제왕적 대법원장 제도를 필두로 소수 엘리트 법관 중심의 폐쇄적 사법부 운영에 있다고 지적하고, 반헌법 반민주적인 법관 블랙리스트 진상규명과 법원적폐 청산, 최고책임자 양승태 대법원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는 투쟁을 벌였다. 민주사법연석회의는 6월 14일부터 8월 29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광화문에서 법학자, 인권활동가들의 거리강연과 시민발언대를 진행했다. 7월에는 전국 1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가 “법관블랙리스트, 민주주의 문제 - 양승태 대법원장 사퇴하고 진상규명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법원 내에서는 6월 신영철 대법관 사태 이후 8년 만에 전국법관대표회의를 구성해 개혁을 요구했다. 헌법에 따라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사법부 구성과 운영에 참여하는 민주적 사법개혁의 필요성이 거듭 확인됐다.







2017. 6. 20

故백남기 농민의 사인 정정은 진상규명의 시작일 뿐.

6월 15일 서울대법원은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정정했다. 사인이 변경된 다음날인 6월 16일, 경찰개혁위원회 발족식 자리에서 그동안 어떤 응답도 없었던 경찰의 일방적 사과 발표가 있었다. 2016년 9월 25일, 317일의 사투 끝에 백남기 농민이 돌아가시자 대규모 경력을 동원해 강제 부검을 시도했던 이가 이철성 경찰청장이다. 책임 인정과 반성 없는 이철성 경찰청장의 사과에 진정성 없는 사과, 원격 사과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변경된 사망진단서가 발부된 6월 20일 백남기투쟁본부는 “사인 정정은 진상규명의 시작일 뿐이다. 국가폭력 살인사건의 제대로 된 해결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살인진압의 책임자들은 영전과 승진을 거듭했다. “사람이 다쳤거나 죽었다고 해서 사과할 수 없다”던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임기를 채우고 아무런지도 않게 퇴임했다. 이들에 대한 처벌과 물대포 사용 금지 등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 비로소 제대로 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것이다.







2017. 6. 21

\

‘광장을 열자! 백남기를 기억하자!’ 집시법·경직법 개정 입법청원

우리에게는 모이고 말하고 행동할 자유가 있다.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함께 도모하는 기쁨은 인간다움을 구현하는 중요한 요소로, 헌법과 국제사회가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보장하는 이유다. 그러나 그 권리는 특정한 장소 앞에서, 권력을 비판하는 주장 앞에서 사라져왔다. 경찰은 교통소통을 혹은 청와대 앞이라는 이유로 집회를 금지시켜 왔고, 불법집회에 대응해야 한다며 차벽을 설치하고 물대포를 앞세웠다. 그 결과 2015년 11월 14일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를 맞아 돌아가셨고,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아직까지 감옥에 갇혀 있다. 집회의 자유가 온전히 보장되도록, 공권력에 의한 희생이 더는 없도록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개정하는 입법청원 캠페인을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500일 주간행동에서 시작했다. 한 달간 진행한 캠페인에 8710명의 시민들이 함께 했다. 물대포 추방, 차벽설치 금지, 청와대·국회 등 집회금지장소 삭제, 교통소통을 이유로 한 집회금지 삭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집시법·경직법 개정을 위해 6월 21일 국회에서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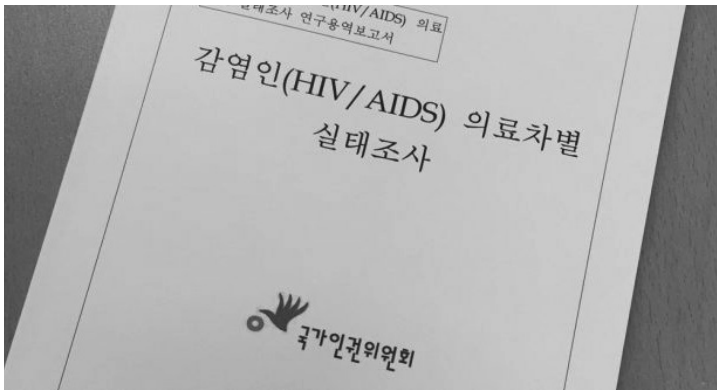


2017. 6. 22

HIV/AIDS 의료차별의 현실을 알 수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연구결과가 발표된다.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용역 발주로 진행된 「감염인(HIV/AIDS) 의료 차별 실태조사」 결과발표회가 6월22일 개최되었다. 2005년에 이어 진행된 두 번째 국가인권위원회 연구과제였고 HIV 감염인이 가장 직접적이고 빈번하게 경험하는 의료차별/진료거부 경험을 조사하였다. HIV 감염인 의료차별은 사회와 가장 구체적으로 만나는 의료현장에서 벌어지는 것일 뿐 아니라, 건강과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감염인들에게 체감되는 정도가 매우 크다. 이에 연구는 인권(건강권)적 접근을 제언하며 성적 낙인문제 해결과 더불어 여성, 트랜스젠더, 이주민, 재소자와 같이 감염집단 속에서도 불평등과 차별에 노출된 집단의 차별실태도 접근해야 함을 주장한다. 나이가 장기요양정책 마련과 같은 감염인 복지에 힘을 실으며 감염인 의료차별을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적용할 것을 제언한다. HIV 감염인과 AIDS 환자가 경험하는 의료차별을 장애인이 의료 환경에서 경험하는 거부, 제한, 분리, 최소화된 권리 등으로 파악할 때 이전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문제점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다.







2017. 6. 28

\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위한 변화는 개혁에서 시작돼야 -국가인권위 개혁 촉구 및 개혁과제 전달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가 인권에 기반한 국정운영과 국가인권위원회 위상 강화를 표명했다. 하지만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인권위의 위상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다. 지난 보수정권 9년 동안을 보더라도, 인권위가 인권위답게 사회구성원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기구로 제자리를 찾을 때, 위상이 강화된다. 그 시작은 바로 인권위의 개혁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그래서 6월 28일 국가인권위 공동행동은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인권위원회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기 위해 필요한 개혁과제 총 6가지를 전달했다. 과거 인권침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책 마련, 인권위의 독립성 강화와 인권위원 후보추천위 구성, 인권위 관료화 극복과 외부인사 사무총장 임명,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시민사회와의 실질적 교류 및 인권현안 개입력 확대 그리고 인권위 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주요한 인권위 개혁과제다.







2017. 6. 29

2017 신입 인권활동가 공동교육

여러 단체 활동가들이 모여 함께 기획한 신입 인권활동가 공동교육을 진행했다(특강 포함 총 11강). 다른 활동가들과의 만남과 교류를 통해 운동의 경험이 수평적으로 흐르고, 이 과정을 통해 인권운동을 새로 시작한 이들이 지치지 않고 자기 활동의 의미와 전망을 찾는 데 도움이 되고자 했다. 공동으로 기획하는 과정 자체가 서로의 고민을 나누며 네트워크를 만드는 시간이었고, 5주에 걸쳐 진행된 공동교육에 참여한 신입 활동가(26개 단체/39명)들은 활동에 필요한 역량도 키우고 무엇보다 이후 활동에 든든한 기댈 언덕이 되어줄 관계를 만들 수 있었다. 또한 마지막 교육 이후 교육 뒷풀이겸, 인권활동가들과 교류와 심의 시간인 네트워크 파티를 진행했다. 인권활동가들과 함께 교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2017. 6. 30

\\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는 경찰에게 고함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경찰은 청와대의 주문에 따라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고 방안들을 잇달아 발표했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에서 저지른 수많은 공권력 남용과 인권침해에 대해 사과는 커녕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경찰이기에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는 그들의 말에서 진정성은 전혀 느낄 수 없었다. 이에 공권력감시대응팀에서는 경찰이 진짜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릴레이 기고를 통해 경찰이 즉각적으로 이행해야 할 5가지 인권과제-▲경찰의 인권침해 역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인권대책 시행 ▲무차별적 개인정보 수집 및 사찰 중단 ▲국민에 의한 경찰 통제 실현 ▲국제인권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즉각 이행-를 촉구했다. 우선적으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없는 '인권경찰'이란 어불성설임을 강조하며, 경찰폭력의 경험이 오늘로 आरोसाेग져 있는 현장들과 함께 인권침해의 주범 경찰을 규탄하는 집회를 6월 30일에 열었다.







2017. 7. 5

균형법제92조의6 폐지. 시민사회 공동의 목표

2017년 7월 5일 1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였다. 반인권법 균형법 제92조의 6 폐지를 요구하기 위해서다. 육군 성소수자 색출사건을 통해 시민사회는 균형법 제92조의6은 동성애를 ‘추한 행위’로 전제하며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동성애 처벌법’임을 확인했다. 올해 유엔 사회권위원회, 고문방지위원회, 국가정례별인권검토에서 균형법제92조의6폐지 권고와 지적이 있었다. 시민사회는 릴레이 1인 시위, 공동 선전전 등 균형법 제92조의6 폐지를 위한 집중행동을 진행했다. 5월 이미 폐지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헌법재판소에도 위헌법률심판 중이다. 이를 위해 민변을 포함한 70여명의 대규모 대리인단이 활동중이다. 균형법 제92조의6 폐지는 우리 모두가 평등하고 존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사회 공동의 목표임이 분명하다. 균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하라.





2017. 7. 5

\

경찰의 인권침해,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우선이다- 인정과 책임, 불처벌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과제 토론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경찰은 재빠르게 '인권경찰'로의 개혁을 외쳤다. 하지만 경찰에 의해 국가폭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지나간 과거로서가 아니라 현재의 고통으로 경찰의 인권침해를 마주하고 있다. 경찰 인권침해의 역사는 불처벌의 역사와 맞닿아 있었다. 그렇기때문에 경찰개혁은 자신들이 저지른 인권침해의 현실을 인정하고, 제대로 진상을 조사한 후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공권력감시대응팀은 지난 10년 간 경찰이 저지른 심각한 다양한 인권침해 사건의 당사자들과 함께 대해 돌아보고, 불처벌의 현재를 확인하며, 진상조사 등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백남기 투쟁본부,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4.16연대가 이 자리에 함께 했다. 이후 8월 25일 경찰의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2017. 7. 6

\

인권과 존엄이 기본이 되는 나라를 위한 새 정부 인권과제 제안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새 정부는 광화문 1번가를 통해 국정과제를 제안받았다. 인권운동+는 인권운동의 주요 의제와 고민들을 국정과제로 제출하기 위하여 인권단체와 활동가들의 고민을 온라인으로 제안 받았다. 인권과 존엄이 기본이 되는 나라를 위해 인권운동의 오랜 고민인 국가보안법부터, 차별금지법 제정, 과거사의 문제, 평화의제, 다양한 국가기관 개혁의 문제까지 17개 영역 81개의 인권과제를 국민인수위를 통해 제출하였다. 집필에는 인권운동+ 포함 66개 단체에서 함께 진행 하였다.







2017. 7. 12

\

유엔에이즈, 한국에서 처음으로 HIV낙인지표조사를 실시하다.

「한국 HIV 낙인지표조사」는 유엔에이즈와 인권재단사람 등의 지원으로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와 낙인지표조사 기획단(이하 기획단)이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사업이다. HIV 낙인지표조사는 유엔에이즈가 전 세계 HIV 감염인이 경험하는 낙인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개발한 연구도구로서 현재 90여 개국에서 이를 도입하고 있으며, 2016년 한 해 동안 진행된 연구결과가 지난 6월 22일 유엔에이즈를 통해 발표되었고, 국내발표는 7월12일에 진행되었다. 연구 결과, 내재적 낙인의 수준이 매우 높음을 확인했다. 10명 중 7~8명은 자신을 탓하고 있었고, HIV 감염 사실이 소문날까 두려움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 자살 충동을 느낀다고 응답한 이도 상당했다. 그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였다. 무엇보다 이 연구는 연구과정을 통해 감염인의 역량강화 목표를 이룰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5명의 감염인 당사자가 조사자이자 연구자가 되어 104명의 감염인을 만나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중 15명은 직접 만나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감염인 조사원들과 토론하며 마련한 10가지 권고안이 연구결과에 반영되기도 하였다.







2017. 7. 14



한국 진보적 인권운동사의 쟁점들 토론회

서교인문사회연구소는 2017년 7월 14일 사단법인 선과 함께 “한국의 진보적 인권운동사의 쟁점들”이라는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서교인문사회연구소(이하 서교연) 인권운동사연구팀은 4.9통일평화재단과 사단법인 선의 지원으로 2016년 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23인의 활동가와 한국인권운동의 역사에 대한 인터뷰 작업을 진행했다. 이날의 토론회는 인터뷰 성과를 바탕으로 서교연 인권운동사연구팀의 연구 논문을 발표하고 인권활동가와 인권연구자들이 함께 토론하는 자리였다.

한국의 진보적 인권운동사에 대한 체계적 정리나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 인터뷰 자료집과 논문들은 한국의 진보적 인권운동의 경험에 대한 역사화, 자료화를 위한 기초 작업이었다. 한국적 인권운동이론의 구축과정에서 이는 역사적 경험에 바탕한 중요한 자료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2017. 7. 15

최저임금, 임금에 대한 우리의 권리를 선언하다

7월 15일 최저임금위원회 11차 전원회의에서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됐다. 주 40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1,573,770원이다. 지난 10여년 동안 몇 백 원씩 찢끔찢끔 인상돼 온 최저임금에 비한다면 대폭 인상이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대폭인상 공약 덕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인간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임금으로서 최저임금에 대한 요구는 오래 전부터 시민사회운동의 주된 요구였다. 특히 올해는 50여 개의 청년, 노동, 인권 단체들이 모여 '최저임금 만원, 비정규직 철폐 공동행동'(만원행동)을 꾸려 다양한 활동을 펼쳐냈다. 6월 30일에는 5만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만원을 외치는 총파업을 일궈냈다. 올해 최저임금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아닌,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직접 행동과 사회적 연대가 일궈낸 소중한 성과였다. 최저임금액 결정에 대해 노동자가 함께 할 수 있어야 하고 인간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선언했다.







2017. 7. 20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 순직 인정된 날

세월호 참사로 세상을 떠난 단원고등학교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

학생들을 살리려다가 목숨을 잃었음에도 단지 기간제라는 이유만으로 순직을 거부당했다. 부당한 상황에 맞서 유족은 싸웠고, 결국 대통령은 순직을 거부한 행위가 잘못이라는 것을, 죽어서까지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인정했다. 곳곳이 싸운 유족 곁에서 한 목소리를 낸 30만 명의 시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아직 순직이 확정되진 않았다. 아직까지 국무회의 심의중이다.







2017. 7. 30

차별에 저항한 영상활동가, 故 박종필 감독님의 장례

2017년 7월 30일은 장애인, 노숙인 등 소수자 인권과 목소리와 사회적 참사의 현장에서 저항의 목소리를 기록하던 영상활동가 박종필 감독님의 장례식이 있던 날이었다. 인권침해의 현장에서는 저항의 목소리를 기록하고 직조하는 영상활동가들을 만날 수 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이 어떤 사회적 조건 속에서 활동하며 살아가는지 잘 알지 못한다. 비단 영상활동가들 뿐만이 아니다. 현장의 모든 인권활동가들이 현장의 무게감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진 활동으로 만성적 피로와 과로에 시달린다. 고 박종필 감독님의 장례를 치르면서, 고 박종필 감독님이 살아오신 이야기들을 전해들으면서, 많은 영상활동가, 인권활동가들은 활동가들의 건강권을 확보하는 문제와 지속가능한 활동의 조건들을 만드는 문제에 대해 한번씩은 생각해보았을 것이다. 활동의 의미를 나누고 연대하는 일 외에도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지속가능한 활동과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고민이 무게를 갖게 된 것이다.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도 2017년 상반기부터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진행했던 프로젝트가 연분홍치마의 ‘당신이 기다리는 다크멘터리의 제작자가 되어 주세요’ (당기다 600) 프로젝트였다.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2017. 7. 10-9. 28), 연분홍치마의 활동은 어떻게 하면 더 잘 알려질 수 있을지, 연분홍치마의 활동이 지속가능하려면 어떤 조건들이 마련되어 할지 생각해볼 수 있었다. 연분홍치마의 고민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겠지만,





2017.8.1

제주생명평화대행진

2013년부터 매년 여름이면 생명평화대행진이 진행된다. 강정의 소식을 알리고 제주 곳곳을 함께 걸으며 제주의 이야기를 듣는 세상에서 가장 큰 학교다. 작년 2월 해군기지 완공 이후 구름비 앞바다에는 수시로 군함이 드나들고 있는 상황이다. 미 해군의 최신 이지스함 줌왈트 같은 무기들이 제주해군기지에 상시 배치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제주해군기지가 미국이 주도하는 대 중국 전초기지로 활용되어 제주도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고통은 확장되고 있다. 무리한 난개발과 주민 동의 없는 제2 공항 추진 등으로 제주 전역이 몸살을 앓고 있다. 그래서 올해부터 강정만이 아니라 제주 전역의 평화를 기원하며 제주생명평화대행진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열렸다. 2017년 7월 31일부터 8월 5일까지 <평화야 고치글라: 평화가 길이다, 우리가 평화다>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2017 제주생명평화대행진, 강정마을에서 출발해 제주 시내까지 6일간 생명평화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2017. 8. 19

\

내 삶에 잊을 수 없는 간이역, 꿈 같은 집을 짓다. 꿀잠 개소식

"이 집이 내가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출생지였다고, 새로운 인류로 거듭난 안식처였다고, 내 생에서 잊을 수 없는 간이역이었다고 말해질 수 있는 그런 꿈같은 집을, 이 세상에 전에는 없던 집을, 함께 짓자."

한뎃잠을 청해야 했던 노동자들에게는 쉼터가 절실했다. '비정규노동자들을 위한 쉼터를 만들자'며 10년을 거리에서 싸운 노동자들이 제안했다. 2017년 8월 19일, 영등포역 인근에 꿀잠이 문을 열었다. 재능연대·시간연대로 쌓인 벽돌 하나하나에 연대가 담겼다. 백기완 선생님과 문정현 신부님은 글씨와 서각을 내놓았고, 노동·사회부 기자들은 잡지를 만들었다. 꿀잠은 투쟁하는 모든 이들의 여름방학 외갓집 같은 쉼터이며, 또 다른 투쟁과 연대를 도모하는 사랑방이다.







2017. 8. 20

\

이주노동자를 더 이상 죽이지 말라.
Don't kill anymore!
820 전국이주노동자 결의대회

2017년, 한국에는 200만명의 이주민이 살아가고, 그 중 100만명은 이주노동자이다. 전국의 아파트 건설현장은 이주노동자가 없는 곳이 없고 식탁에 올라오는 대부분의 농수산물 역시 이주노동자들이 피땀 흘려 농사 지은 결과물이다. 2017년 많은 이주민들이 목숨을 잃었다. 이들은 돈을 벌기 위해 한국 행 비행기를 탄 것이지 죽음을 택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죽어야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을 것 인가.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지금 당장 고용허가제의 폐지와 이주노동자 인권, 노동권 보장을 위한 새로운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 8월 20일 전국이주노동자결의대회에서 800여명의 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 모여 한국사회의 적폐, 죽음을 부르는 고용허가제를 폐지하라 함께 외쳤다.







2017.8.22

\
**"부러뜨린 각목 휘두르며 협박/감금...
 대걸레 부러뜨려 폭행"
 이것이 학대가 아니라 생활지도인가**

"학교에서 학생 간 폭력은 폭력으로 인정하면서도 교사가 학생에게 가하는 폭력은 '체벌'로서 용인되고, 우리 사회에서는 폭력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 청소년도 폭력과 인권침해에 시달리지 않는 사람으로 살고 싶고 싶다. 사람으로 대해 달라"

-나날(부천 청소년단체설립준비위원회 세움 활동가)의 발언

김포외고에서 일어난 폭력 사건에 대하여 검찰의 기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2017년 3월, 한 교사가 각목과 대걸레를 부러뜨려 학생들을 폭행하고 협박한 사건이었는데 검찰에서 이 사건을 "지도과정"에 해당하여 "사회상규상 위배되지 않는다"고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이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사람들은 검찰에 제대로 된 수사/기소 처분을 촉구하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체벌 금지가 제도화 된 지 5년이나 지났음에도 학교에서는 공공연히 체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피해자가 학생이 아니었다면 당연히 폭력적 상황으로 받아들여졌을 일이 '생활지도'라는 이름으로 용인될 수 있다는 것은 여전히 바뀌지 않는 학생인권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우리는 인권의 이름으로 더 이상 폭력이 '지도'로 미화되지 않는 사회를 요구한다!







2017.8.22

\
손잡고가 손배소 당한 날

<손잡고>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 정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가압류가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다. 그런데 ‘손잡고’가 손배소를 당했다. 그것도 손배소의 전 주축멤버였던 한홍구 교수에게 말이다. 손잡고 활동가 부당하고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소위가 펴낸 보고서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 이유다. 시민사회에서 활동가의 인권, 노동권 침해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기 위한 시도는 이렇게 위협받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의 운영에 있어서 민주적이고 인권 존중의 조직 문화가 만들어지길, 무엇보다 진실을 알리는 일이 소송을 수단으로 위협 받지 않기를 바란다.





서울중앙지법 2017가소6927977 손해배상(기) 2017.08.22 제출 원본과 상위 없음



소 장

원 고 한흥구([redacted])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웅

피 고 1. 손잡고
 ([redacted])
 대표자 배춘환
 2. 박래균
 ([redacted])
 3. 박병우
 ([redacted])
 4. 윤지영
 ([redacted])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 박래균, 피고 박병우, 피고 윤지영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7.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비율





2017. 8. 25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영정 앞에 국가가 서기까지 5년

2012년 8월 21일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광화문지하역사농성을 시작했다. 김주영님의 영정을 시작으로 매년 영정은 늘어갔다. 가난해서, 가족에게 짐이 될 수 없어, 맹장과 폐렴 같은 병을 치료받지 못해, 수용시설에서 맞아서, 또 불에 타 죽었다. 그 죽음들의 명복만 빌기에는 너무 촘고, 한스러웠다.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에게는 안전한 나라에서 존엄하게 살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던 5년. 이 억울한 죽음들 앞에 국가가 단 한 번도 애도하지 않았던 5년.

2017년 8월 25일 새 정부가 영정 앞에 섰다. 그 서러운 죽음들 앞에 보건복지부 신임장관이 고개를 숙였다. 이들을 죽인 나쁜 제도는 아직 바뀌지 않았는데, 사실 우리는 위로받았다. 기억이 의미가 되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기대가, 그래서 다시 싸울 수 있겠다는 기대가 생겼다. 5년을 함께 한 이들 모두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2017. 8. 29

\

대법원, 삼성전자 노동자의 희귀질환(다발성경화증) 산업재해 인정 취지로 원심판결 파기환송

“7년이나 기다리느라 지치고 힘들었지만 많은 분들이 도와 주셔서 좋은 결과 나오게 되어 정말 다행입니다. 이후 다른 피해자분들은 이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아도 산재가 인정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에서도 더 지체하지 말고, 제대로 보상해서 아픈 사람들이 힘들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희진 님의 소감

이희진 님은 삼성전자LCD 천안공장에서 모토와의 맨 마지막 단계인 불량 화질검사 업무를 하다가 건강상 이유로 퇴사한 뒤 다발성경화증을 진단받았다. 2010년 7월 반올림과 함께 산재신청을 했고, 7년이 지난 2017년 8월 29일 대법원에서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이희진 님의 산업재해 인정으로 삼성전자 노동자들 중 3명이 다발성경화증으로 산업재해 인정 판결을 받게 됐다. 앞으로 근로복지공단, 역학조사기관인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전향적 태도를 기대하며 입증책임 전환 등 보다 손쉽게 산재인정이 될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도가 개정되길 바란다. 삼성은 더 이상 꼼수부리지 말고, 이희진 님의 바람처럼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직업병 피해자들에게 진실된 사과, 정당한 보상을 실시하길 바란다.







2017. 8. 31

로힝야인에 대한 폭력에 반대한 날

2017년 미얀마 정부가 로힝야인들에 대한 인종청소 수준의 인권침해를 저지르면서 국제적인 인권현안으로 등장했다. 이에 항의하며 한국의 인권단체들이 미얀마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 개최했다. 기자회견에는 국내 거주 중인 로힝야 난민도 참석해 함께 미얀마 정부를 규탄했다. 무슬림이 많지 않은 국가인 한국에서 기자회견이 열리자 많은 로힝야인들이 감사와 지지를 SNS를 통해 보내왔다.







2017.9.2

파견법 폐기, 간접고용 철폐 2017 파견노동포럼

9월 2일 '파견법 폐기, 간접고용 철폐'를 내건 2회 파견노동포럼이 진행되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하는 이야기를 나누고, 파견법의 문제에 대해 법률가들과 함께 대중교안을 만들어 시연을 했다. 그리고 조직화를 위한 토론을 진행했다. 여전히 조직된 파견 노동자는 극소수이고, 파견법에 맞서 싸우기보다는 파견법을 발판 삼아 불법을 제기하고 정규직 지위로 나아가는 투쟁이 많은 것이 우리 운동의 현실이다. 그런 현실로 인해 사회적인 흐름을 먼저 만들어 보자는 것이 파견노동포럼의 고민이었지만, 늘 고민은 다시 파견노동자와 함께 이 투쟁을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로 돌아온다.

두 해를 진행하며 성과가 있다면 파견법이 폐기되어야만 하는 악법이라는 인식이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이 작은 성과를 가지고, 좀 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만들어 가는 것이 다음 포럼의 몫이 될 것이다.





2017.9.3

\

"빼앗긴 물건은 인권입니다" 서울지역 중고생 소지품 압수 사례조사 발표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는 한 달간 <서울 지역 중고등학생 소지품 압수 사례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옷, 화장품, 액세서리, 휴대전화, 전자기기 등 여러 물건들을 학교에서 압수당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자신의 물건을 함부로 수색당하거나 압수당하지 않고 사생활을 존중 받는다는 인권의 기본적인 내용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다. 강제로 학생의 몸과 소지품을 뒤지고 빼온 물건을 부수는 것은 그 과정에서 학생에게 고의로 상처를 입히고 모욕감을 주는 폭력이다.







2017.9.5

\

차별에 저항하라! 전장연 10주년!

이동권 투쟁, 활보 투쟁, 시설비리 투쟁,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폐지 투쟁, 420투쟁.

10년을 하루같이 투쟁하고, 기자회견 하고, 점거하고, 잇기도 전에 후원을 요청했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2017년 9월 5일 출범 10년을 맞았다. 전장연 10년 중 절반을 쏟아낸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광화문농성을 1842일 만에 중단한 날이기도 하다.

그동안 함께 싸우는 이,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이도 많아졌고, 덕분에 우리의 목소리는 아주 조금 힘을 갖게 됐다. 전장연 10년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더 확실히 알게 된 것은, 싸워야 세상이 달라지고 연대해야 나도 우리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전장연 10년 투쟁으로 우리는 앞으로 10년간 싸울 종자돈을 만들었고, 이 종자돈을 써가며 다가올 10년을 지난 10년과 같이 투쟁하고 저항할 것을 다짐했다. 10주년이 지난 지금도 전장연은 이동권, 노동권, 탈시설, 참정권 등의 의제로 계속 싸우고 있다.







2017.9.7

사드가 소성리에 추가 배치된 날

9월 7일 오전 8시 12분, 사드 장비를 실은 차량들이 성주 소성리 마을회관을 홀연히 통과했다. 전날 오후부터의 밤샘 긴 대치 끝에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연대 대오를 경찰들이 폭력적으로 끌어낸 뒤의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를 지시한 결과였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사드는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주민들의 동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의 최대 적페라며 대통령이 되면 최우선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광화문을 수놓은 촛불들과, 성주 김천 주민들 앞에서 말이다. 그러나 아무 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그날 소성리에서 8000명의 경찰이 자행한 폭력과 사드 반입이라는 결과는 문 대통령 당선 전과 다를 것이 아무 것도 없었다.





2017.9.7

인권운동 한발 더 내딛기 위한 워크숍

문재인 정권 출범이후 인권운동은 다양한 국면을 맞이했다. 물론 언급되지 않는 인권의제들도 있었으나 새로 시작하는 인권의제, 개혁을 통해 바뀐 상황들이 존재하였고, 그 안에서 인권운동은 어떠한 방향을 고민하고 있는지에 대해 서로 소통하고 논의하는 자리로 인권운동 한발 더 내딛기 위한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워크숍은 1부는 문재인정권 출범이후 변화된 상황에 대한 공유, 2부에서는 정치개혁과 개헌에 대한 간담회, 3부는 개헌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사안에 대한 해답보다는 서로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가 소통하고, 만날 수 있는 지점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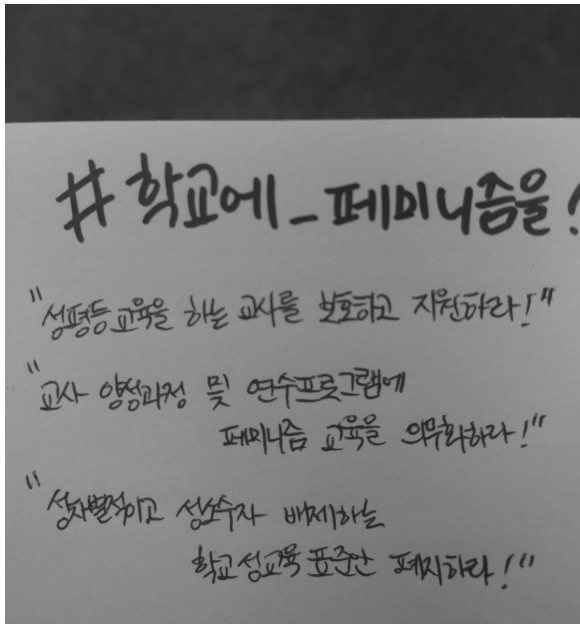
2017.9.7

\
#학교에_페미니즘을

7월 27일 한 인터넷 매체에 ‘학교에 페미니즘 교육이 필요한 이유 세 가지!’라는 인터뷰 동영상이 게시되었다. 이 영상이 게시된 후 교사가 편향된 생각을 학생에게 주입한다며 몇 달 동안 해당 교사에 대한 공격이 쏟아졌으며, 온라인은 물론, 교육청과 학교에도 항의가 빗발쳤다. 게다가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이하 전학연), 학생인권조례폐지운동 본부 등의 단체가 가담해 해당 교사를 ‘남성 혐오’, ‘동성애 조장’ 교사로 왜곡 비방하고 해당 교사와 학교장을 형사 고발했다. 이 사건은 페미니즘/페미니스트에 대한 낙인과 공격이 개인의 신변에 까지 영향을 미친 사건이고, 나아가 학교에서 페미니즘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으려 한 시도였다.

9월 7일 ‘페미니스트 교사들에 대한 비방·공격 중단 촉구와 법적 대응 발표 기자회견’이 있었다. 전교조는 전학연과 단체 대표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조선일보와 작성 기자에게 정정 보도 청구 소장을 접수했다. 그리고 8월 26일과 9월 26일에는 초등성평등연구회의 제안으로 ‘#우리엔겐_페미니스트_선생님_필요합니다 #학교에_페미니즘을’ 해시태그를 이용한 온라인 공동행동을 펼쳤다. 이후 ‘페미니즘 교육 실현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 페미니즘 교육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2017.9.7

\

'인권있는 인권단체, 조직 내 민주주의를 위한 운동'을 고민하다

8월 10일, “유엔인권정책센터는 인권단체가 맞습니까?”라는 입장문을 발표하며 유엔인권정책센터(KOCUN) 사무국 활동가들이 전원 사퇴했다.

코쿤 활동가들은 입장문을 통해 위계에 따른 복종, 비민주적이고 독단적인 의사결정 구조, 권력 독점과 남용, 단체 재정 문제를 개인 활동가에게 책임 전가시키는 문제를 제기했다. 또 인권 단체 활동가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문제에서부터 조직 내 상호 존중, 조직 내 위계, 고질적인 재정의 불확실성 등 현재 인권운동 단체 너머 시민사회에 몸담고 있는 이들에게 반복되는 문제들을 마주하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질문을 던졌다. 그 질문에 48개의 인권단체와 458명의 개인 및 인권활동가들이 사퇴한 코쿤 사무국 활동가들을 지지하는 우정의 선언을 발표하며 연대와 함께 후속 행동을 다짐했다.

9월 7일, 전 유엔인권정책센터 활동가, 인권 및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모여 ‘유엔인권정책센터 사무국 활동가 전원 사퇴를 통해 본 조직 내 민주주의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코쿤 사태와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던 시민단체 ‘푸른사람들’ 활동가를 비롯하여, ‘손잡고’, ‘평화박물관’의 사례를 발표했고 ‘시민사회활동가 대나무숲’,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에서 조직내 민주주의에 관한 고민을 나눴다.

간담회 참여자들은 조직내 민주주의를 인권단체들이 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





의 ‘운동’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이렇게 함께 모여 논의하는 자리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갈등하지 않는 조직을 표방할 것이 아니라 발생한 갈등을 어떻게 인권적으로 풀어낼지를 고민하는 힘이 필요한 때다. 문제를 공공 싸매고 있기보다는 드러내고, 그 경험을 꾸준히 기록하고 함께 토론할 때 변화는 시작될 것이다.





2017.9.12

\
과로 사회를 멈추자

최근 5년간 70여 명의 집배원이 교통사고, 과로사, 자살 등으로 사망했다. 故 이한빛 피디의 자살, 졸음운전 하던 버스 기사의 추돌사고 역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린 탓이다.

일반적인 노동시간을 초과하는 업무가 필요하다면, 그만큼 인원을 늘리면 된다. 그러나 연장근로에 대한 제한이 없어 ‘묻지마 장시간 노동’을 합법화하는 근로기준법 59조 특례조항(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이 문제다. 공중의 편의나 업무의 특성을 이유로 한없이 일하게 하는 ‘근로기준법 제59조’는 기업의 노동착취를 용인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9월 12일 과로사OUT 공동대책위원회가 발족했다. 노동·사회·법률단체가 뭉쳤다. 과로를 멈출 때 노동자는 기계 부품이 아닌 존엄한 인간으로 살 수 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이제 과로 사회를 멈추자!







2017.9.12

차별금지법제정촉구서명운동 선포일

‘평등한 세상에 나중은 없다!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2017년 9월 12일, 차별금지법제정촉구 서명운동이 시작되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소속 단위들이 돌아가며 평일 낮마다 진행했던 광화문 광장 서명 캠페인은 세계인권선언일 전날인 12월 9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세계인권선언일 맞이 대규모 집회 ‘우리가 연다, 평등한 세상’를 통해 마무리되었다. 그 외에도 소속단위들의 캠페인이나 각종 행사를 통해 서명을 받았고, 온라인을 통해서도 서명을 받았다. 이 서명 캠페인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직접 만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의미를 알릴 수 있었으며, 평등과 인권을 보장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었다







2017. 9. 19

트럼프가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겠다고 협박한 날

9월 19일 트럼프는 UN총회 연설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을 방어해야 한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밖에 없다”고 발언했다. 사흘 뒤 9월 23일 미국의 전략 폭격기가 북한 동해 국제공역까지 날아갔다. '최강의 전투기'니 '북한을 몇 번이나 초토화시킬 수 있는 항공모함'이 한반도에 찾아온다는 소식은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다. 대북 공격이 그저 '공갈'이 아닌 '실제 쓸 수 있는 옵션'으로 검토되고 있다. 반면 대화와 협상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 트럼프는 "북한과 전쟁이 난다면 거기(한반도)서 죽는 것이지, 여기(미국)에서 죽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도 했다. 우리는 바로 그곳, 한반도에서 살고 있다. 전쟁위기 앞에서 우리의 생명과 권리가 너무나 위태로운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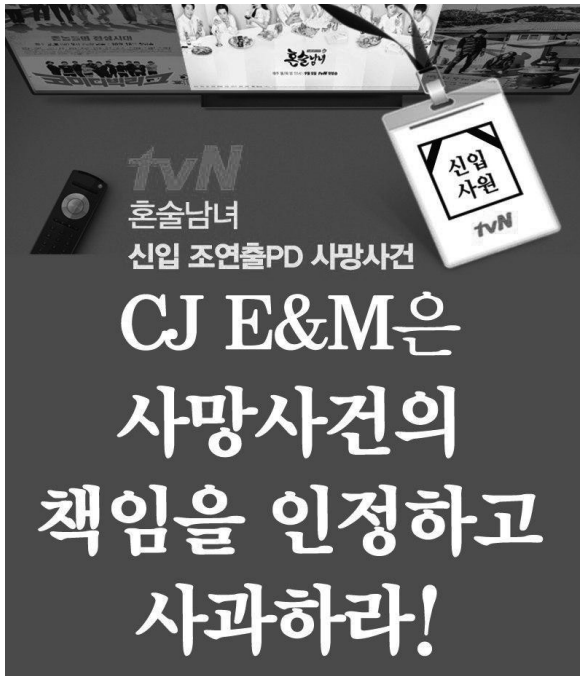


2017.9.20

\
카메라 뒤에 사람이 있다.

지난해 (2016년) tvN 혼술남녀 신입조연출 장시간노동, 누군가를 착취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방송제작현장에 고통스러워하다 이한빛님이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그 이후 시민사회노동인권단체는 tvN 조연출 사망사건대책위를 결성해 고인의 명예회복과 tvN의 재발방지대책을 위해 활동했다. 결국 tvN은故 이한빛pd의 죽음에 사죄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였다. 그 이후 대책위는 이한빛pd의 죽음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방송제작환경전반의 문제라고 생각하여, 방송업계 종사자들을 인터뷰 해 장시간/고강도노동/인권침해의 문제등을 사회적으로 알리는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방송업계종사자들의 장시간, 고강도노동과 권위적인 조직문화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자리였고, 이후 정치권, 방송업계등은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 tvN '혼술남녀' 신입 조연출 사망사건 대책위원회 -





2017.9.21

\

사드배치 위해 <종교CARE팀>앞세운 경찰폭력, 인권위 진정

9월 6일과 7일에 걸쳐 사드 잔여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를 강행하기 위해 동원된 경찰 병력은 8000명. 소성리 주민들과 종교인, 인권활동가, 평화활동가 400명을 막기 위해 완전무장을 한 경찰들은 중장비와 견인차 수십여 대를 동원해 주민들의 차량을 끌어내고, 마을의 길목을 막아서며 마을을 고립시켰다. 하지만 경찰이 발표한 부상자는 0명이다.

이날 경찰은 '종교CARE(케어)팀'을 만들어 인권침해를 자행했다. 성직자들의 팔, 다리를 질질 끌어내고 여성성직자의 쪽진 머리채를 휘어잡았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인권침해를 감시하였던 인권활동가도 십자인대 파열 등 전치 7주가 넘는 중상을 입었고, 앰불런스가 자유롭게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총 100여 명에 달하는 부상자가 발생했다. 'CARE'는 폭력을 은폐하는 포장에 불과했다. 이에 9월 2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경찰의 폭력을 규탄하며 진정을 넣었다.







2017.9.22

빵은 불법파견과 임금체불로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9월 22일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에 제조기사를 직접고용하고 체불된 임금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전국 3200여개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제빵과 카페 업무를 하는 5378명의 제조기사는 본사나 가맹점 소속이 아닌, 파리바게뜨와 업무협정을 맺은 11개 협력업체 소속이다. 합법적인 ‘도급’이라면 업체가 도급받은 일감을 독자적으로 처리해야 하지만 파리바게뜨 제조기사들은 가맹점이나 본사의 감독 아래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파견’에 해당한다. 더군다나 제빵업은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업종이므로 제조기사들은 불법 파견을 당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전산조작으로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연장·휴일근로수당 등 총 110억여원을 체불했다.

그런데도 파리바게뜨는 시정명령 집행정지에 대한 행정소송으로 반발하고, 합작회사를 통한 고용이라는 꼼수를 부리며, 제빵 기사의 월급만큼 협력업체가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 속에서 직접고용을 하면 회사가 망한다는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







2017. 9. 23

전국 각지에서 퀴어문화축제가 개최되다

올해로 9회를 맞이한 대구퀴어문화축제에 이어 9월23일에는 제1회 부산퀴어문화축제가 열렸고 10월 28일에는 제1회 제주퀴어문화축제가 열렸다. 이처럼 지역 안에서 자발적으로 성소수자의 인권과 평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연대하며 힘을 받는 자리는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예정이다.

2017년 9월 23일 해운대 구남로에서 부산의 첫 퀴어문화축제가 열렸다. 45개의 부스와 공연, 해운대 일대 행진으로 진행되었다. 해운대 구청 도로 점용 불허 처분 이후 구청과의 행정소송이 행사와 동시에 진행되어 걱정이 많았으나, 부산시민의 부산퀴어문화축제를 위한 열망은 쉽게 꺾을 수 있는 게 아니었다. 이 날은 만 명이상이 참가했고 해운대 바다는 무지갯빛으로 일렁였다.

- 부산퀴어문화축제 기획단

제주퀴어문화축제는 조직위원회 내부에서 "짜장면이 쏘아 올린 작은 공"이 만든 축제라고 한다. 한 짜장면집 사장님이자 활동가인 어떤 이가 내뱉은 혐오 발언에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축제를 만들어보자고 모였다. 처음에 50명을 목표로 했던 축제는 혐오의 다양한 공격을 받았다. 법적 싸움도 했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연대해주었다. 우리는 그 연대의 의미를 살려 혐오에 맞서기 위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외치기로 했





다. 축제는 그렇게 그 혐오의 공이 구르고 굴러 인권을 외치는 연대의 눈덩이를 키워냈다. 아웃팅을 겁낸다는 작은 지역에서 축제 당일 퍼레이드 때 집계 결과 1천 명, 그것도 청소년의 비율이 반이 넘는 축제였다. 다른 데도 있는 그저 그런 축제가 아니라, 소도시에서도 성소수자가 드러내고 살 수 있다고 보여준 성소수자 인권 가시화의 날이었다.

- 제주퀴어문화축제 기획단





2017. 9. 26

\

"청소년도 시민이다!", "2018년부터는 청소년도 투표하자!" 촛불광장의 동료, 청소년인권 보장을 위한 '촛불청소년인권법 제정연대'의 출범

청소년운동의 오랜 숙제였던 학생 인권과 청소년 참정권,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 보장의 의무를 법으로 명문화하기 위한 '촛불청소년인권법' 제정연대가 출범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은 ▲학생인권법(초중등교육법 개정) ▲아동청소년인권법 ▲청소년 참정권 보장(선거법, 정당법 등 개정) 이 3가지 입법 과제를 묶어서 부르는 이름이다. 청소년들은 새로운 시대에 자신의 삶의 현실이 바뀌기를 바라왔으며,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를 비롯한 인권활동가들은 촛불청소년인권법으로 그 바람이 실현될 수 있을 거라 주장했다. 더 많은 청소년들에게 참정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당법,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고, 학생인권조례가 전국에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며, 1991년에 한국 정부가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국내법으로 실현시킬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출범식은 200여개 단체와 함께 앞으로 활발히 운동을 진행해 갈 촛불청소년인권법 제정연대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였다.





2017 프로젝트 <그날들>





2017.9.27

\

우리는 평등한 개헌을 원한다! 국민주도 헌법개정을 위한 시민대회

9월 한 달간 헌법 개정을 위한 국회 개헌특위의 전국순회 토론회가 진행됐다. 개헌에 대해 보다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기위한 토론회였다. 그러나 토론회장 안과 밖에는 혐오선동세력들이 결집하여 "사람 NO! 국민 YES!" "양성 평등 NO! 성평등 YES!"를 외치며 억지여론을 조장했다. 심지어 일부 정치인들은 혐오선동세력의 집회에 참석하여 지지발언 및 축사를 하기도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시민들의 토론회 참여를 제한했고, 진행과정또한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 더욱이 이번 개헌은 촛불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보다 평등하고 정의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기에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다양성과 평등, 민주주의를 외치는 즐거운 시민대회를 개최하였다. 다양한 목소리가 담길 바라는 의미로 다양한 재료가 한데 들어가는 비빔밥을 만들어 나눠먹으며 우리가 원하는 개헌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어 말하기를 진행하고 평등을 외치며 행진했다. 그 날은 개헌의 과정과 내용에 있어서 배제와 밀어냄이 아니라 더 많은 평등과 정의가 이야기 되길 바라는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목소리가 외쳐지는 날이었다.





2017. 9. 28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출범

9월 28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세계 행동의 날'을 맞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의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다양한 여성들이 각자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붉은 줄로 서로를 연결하는 퍼포먼스도 함께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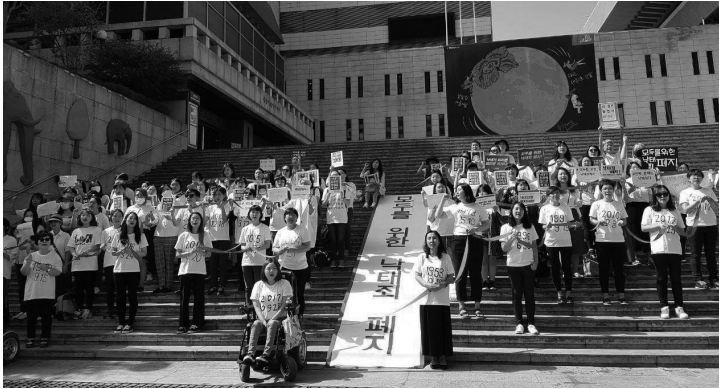
10월에는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미프진 도입'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에 23만 명이 참여했고, 11월 26일에는 조국 민정수석을 통해 청와대가 입장을 밝혔다. 이 답변에서 청와대는 현행 '낙태죄'가 국가와 남성의 책임은 삭제한 채 여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해 왔다는 점 등을 인정했지만 아직 '낙태죄'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12월 2일에는 작년에 이어 <2017 검은시위> "그러니까, 낙태죄 폐지"를 진행한다. 현재 '낙태의 죄'라고 명시되어 있는 현행 형법 269조에 관한 위헌청구 심판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있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은 지금까지 '태아의 생명권 대 여성의 선택권'의 대결구도처럼 인식되어 온 '낙태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 장애, 연령, 경제적 조건, 가족상태, 혼인여부, 이주상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질병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임신이나 출산이 제약을 받는 일도, 임신중지를 이유로 처벌받는 일도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 '낙태죄 폐지'는 이런 사회적 조건들을 유지시키고, 이용하면서 '낙태죄'를 통해 여성에게 그 책임을 전가해 온 국가의 인구관리 정책과 성적 통제의 문제를 드러내는 요구이다. 법 조항 자체의 폐지와 함께 보다 폭넓은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기를 기대한다.





2017. 9. 29

국토 이곳저곳 자유롭게 이동하고 싶은
장애인들의 희망버스 출발하다!

2001년 오이도역 장애인 리프트 추락 사고를 계기로 "장애인 이동권 투쟁"이 시작되었고 4년의 질긴 투쟁으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고속·시외·마을버스 중에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는 저상버스는 0대이다. 시내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은 운영되고 있지만, 지자체 예산 규모에 따라 지역 편차가 발생하여 도서·산간 지역 거주 장애인은 여전히 외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장연은 추석을 앞둔 9월 29일, 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 승강장에서 맨바닥에 무릎 꿇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했다. 때마침 '추석 연휴 특별교통 대책 고속버스터미널 현장점검' 중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났고, 김 장관은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절실한 요구와 척박한 현실에 공감을 표하고 정부의 책임을 약속"했다. 이후 민·관이 참여하는 "장애인이동권보장위원회"가 구성되어, 장애인 이동권 보장 정책을 협의 중이다.







2017.10.4

\

삼성은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직업병 피해자 이해정님을 잊지않겠습니다.

‘전신성 경화증’을 앓던 삼성반도체 직업병 피해자 이해정 님은 2017년 10월 4일 하늘나라로 떠났다. 이해정 님은 삼성 반도체/LCD 직업병 피해노동자로 80번째 사망자이자, 삼성그룹의 전자계열사 중에서 118번째 죽음이다. 이해정 님은 본인과 같은 피해자가 또 나오지 않길 바랐다. 또한 삼성을 향해 당시 가족이 아파도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냐며 미안하다고 사과는 안 해도 되니 앞으로는 이런 똑같은 병이 없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했었다. 고인은 병이 깊어지면서 누워 잘 수도 없어 쿠션을 대고 앉은 채로 자야했고, 손가락 끝이 괴사되어 많이 고통스러웠다고 한다. 이해정 님은 삼성의 무책임한 태도에 항의하기 위해 반올림 농성 중 ‘피해자 이어말하기’ 인터뷰에 참여했고 몸이 건강하다면 나가서 일인시위라도 하고 싶다며 삼성직업병 문제를 알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했다. 앞으로도 삼성이 내미는 부당한 개별보상을 거절하고, 아픈 몸에도 끝까지 연대하려했던 이해정님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삼성은 더 이상 죽이지 마라!







2017. 10. 10

언론이 조장한 HIV 여성 감염인에 대한 혐오

2017년 10월은 HIV 여성감염인에 대한 혐오가 언론에 의해서 조장된 한해였다. MBC는 10월 10일 [단독] 에이즈 감염 여중생 성매매... 성매수 남성 추적 중'이라는 기사를, 부산일보는 10월 19일 [단독] 부산 에이즈 성매매 여성, 부산시 집중 관리 대상이었다'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단독'이라는 말머리를 달고 나온 기사는 삽시간에 비슷한 후속보도를 무수히 낳았고 언론은 사실과 정보, 이에 대한 정확한 문제와 대책을 짚기보다는 HIV 여성감염인에 대한 공포를 양산하고 사회적 비난과 처벌을 이끌어내는 효과를 낳았다.

HIV 감염인 인권과 HIV 예방은 같은 목표를 향해간다는 것이 상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감염인을 악마화하고 사회를 위협하는 위험으로 표상하며 '추적'과 '관리'라는 말로 인권과 예방 모두를 어렵게 하는 퇴행적 모습을 보였다. 다시한번 언론보도의 인권침해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각성하고 인권보도준칙을 존중함으로써 언론이 소수자를 공격하는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





2017. 10. 12

대구 '청소년 노동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공동행동' 발족

2017년 한해 동안 대구시, 대구 수성구, 달서구의회가 연말에 청소년노동인권조례를 부결하거나 보류했다. '반기업', '반시장경제 정서 유발' 등을 내세우며 노골적인 반대의 입장을 공공연히 펼치고 있는 반대세력이 자유한국당 소속 지자체 의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돌파하고자 '대구 청소년 노동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공동행동'이 출범했다.

사실 이는 대구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2016년 12월 인천, 2017년 9월 전남 순천 등에서도 지자체 의회에서 청소년노동인권조례를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주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던 반동성애 세력이 중심이 되어 영역을 가리지 않으며 '인권'과 '평등'이 적힌 모든 법제도를 공격하고 있다.







2017. 10. 13

인권의 가치를 지키자! 충남인권조례를 지키자

충청남도 인권조례는 2012년 5월 제정되었다. 하지만 일부 보수기독교단체들은 2016년부터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성소수자, 성평등, 성지향성 등의 언어들 문제삼아 지방자치단체들을 압박하기 시작했고, 시·군 의원들은 폐지를 약속하거나 적극적으로 주장하기도 하였다. 지역 인권활동가들이 일련의 사태들을 보며 인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충남도청의 인권 퇴보적인 입장을 지적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계속되는 민원으로 무산되었다. 하지만 지역사회에 필요한 목소리를 뿌리내리기 위해 비록 충남도청은 아니었지만 활동가들이 함께 모여 의미있는 토론회 자리를 이어갔다.





2017.10.16

동양시멘트 노동자, 정규직으로 복직

9월 20일 동양시멘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조인식을 통해 회사와의 기나긴 투쟁을 마무리하고 10월 16일 당당하게 정규직으로 복직했다. 노조를 만든 뒤 불법파견으로 제소하고 법원에서도 불법파견을 인정했지만 오히려 노동자들은 해고되고 7명이 구속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동양시멘트를 인수한 삼표가 교섭에 제대로 나서지 않아 이들은 934일간 삼척공장과 광화문 이마빌딩 앞에서 투쟁해야 했다. 광화문에서 다른 투쟁사업장과 함께 고공농성도 했다. 불법파견을 인정받고도 원청의 선별채용으로 노조가 무너지거나 일부만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은데 동양시멘트 노동자들은 투쟁의 힘으로 정규직 복직을 이뤄냈고, 모두가 함께 현장으로 돌아갔다. 동양시멘트 노동자들의 투쟁은 사내하청 노동자 투쟁의 새로운 희망이다.







2017. 10. 17

\
아덱스 저항행동의 날

10월 17일부터 22일까지 열린 한국 최대 무기 박람회 ‘서울 아덱스 2017(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의 진짜 이름은 ‘살인무기 전시회’다. 전 세계 전쟁기업들이 생산하는 무기로 매년 55만 명, 하루 1,500명이 사망한다. 평화단체들은 2011년부터 무기박람회에 저항해 대안 전시인 ‘평화군축박람회’를 개최하여 무기산업이 초래하는 군비경쟁의 악순환을 알려왔다. 올해는 전쟁장사꾼들의 파티인 ‘서울아덱스 2017 환영리셉션’이 열리는 호텔을 찾아 전쟁장사꾼들을 향해 ‘전쟁장사를 멈춰라!’라고 외쳤다. 전쟁기업들이 무기거래 계약을 맺는 행사장도 찾아가 방위산업 비리를 비판하고 무기 거래를 반대하는 구호 팻말을 들고 행진했다. 2016년 전세계 군사비는 전년보다 0.4% 증가한 1조 6천억 달러에 달한다. 전쟁을 생산하는 무기거래는 중단되어야 하며, 그 돈을 인류의 복지와 평화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







2017. 10. 18

체육대회 대신 쫓기대회 열다

퀴어여성네트워크는 '성적 지향, 성정체성, 성별 표현에 상관없이 누구나 즐기는 스포츠'라는 취지로 10월 21일 동대문구체육관에서 <제1회 퀴어여성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성별정체성과 젠더표현을 이유로 검열당하지 않는 공간에서 배드민턴, 풋살 경기와 자유투 대회 등 신나는 게임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은 대관허가를 해놓고 며칠도 안 돼서 항의민원과 미풍양속을 운운하다 대관을 취소해버렸다. 어떻게든 차별에서 면피하기 위해, 체육관에 빗물이 새서 공사를 해야 한다는 막장 연극까지 하면서 말이다. 지자체가 원칙도 없이 성소수자혐오성 민원에 굴복해 체육행사를 가로막는 상황에서, 우리는 스포츠가 인권임을 다시 한 번 상기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18일 동대문구청 앞 광장에 모였다. 발언자들은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며 스포츠 영역에서 소외된 여성성소수자의 존재를 알렸다. 모두가 평등하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했다. 그리고 모든 참가자가 축구공이 그려진 손피켓을 구청사 문에 붙이며 항의했다. 성소수자 차별에 대응하는 서로의 마음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드는 순간이었다.

퀴어여성 체육대회는 체육관 대관 차별 사건 덕분에(?) 많은 언론의 관심과 대중의 지지를 받았다. 지자체들이 성소수자에게 빗장을 걸어 잠글수록, 성소수자는 더 드러나고 말하게 되어있다. 내년 봄 더욱 붐업(boom up)된 체육대회를 기대하고 응원해달라!







2017. 10. 19

유엔 사회권위원회, 강력하고 구체적인 권고들 쏟아내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규약 위원회(사회권위원회)는, 한국의 사회권 상황 전반을 심의(9.18~21, 제네바)한 후, 한국 정부의 정기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E/C.12/KOR/CO/4)를 공식 채택했다. 사회권위원회는 특히, △한국 기업의 인권 침해 문제 대응,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모든 노동자를 위한 노조할 권리 전면 보장 및 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을 주요 권고 사항으로 꼽으며, 18개월 내에 이행상황을 추가 보고하도록 한국 정부에 요구했다. 그 외에도 성별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구체적 조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파업권 보장, 홈리스 문제 해결, 주택임대차 계약갱신 보장, 낙태의 비범죄화,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차별 없는 건강권 보장, 동성 간의 관계를 범죄화하는 균형법 조항 폐지,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에 맞서기 위한 인식 제고 캠페인, 자살 예방 노력 강화 등 다방면에 걸친 강력하고 구체적인 권고들을 쏟아냈다. ‘UN사회권심의대응 NGO모임’이 1년여에 걸친 노력 끝에 얻어진 권고이기도 한데, 사회권 현실을 개선하는 정부의 노력이 이어지기를 촉구한다.







2017. 10. 20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되던 날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은 지난 12년간 신고리 핵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대도시로 보내는 765kV 초고압송전선로를 막아내기 위해 싸워왔다. 송전탑만 바라보다가 그 끝에는 '핵발전소'가 있다는 깨달음으로 신고리 1호기부터 지금까지 탈핵 운동에 성실하게 참여해 왔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라는 공약에서 후퇴해 '공론화'라는 이름으로 시민들에게 공을 넘겼고, 밀양 주민들은 그 '공론화'의 마당에 초대받지도 못한 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3개월간 전국 곳곳을 다니며 온 힘을 다해 호소하고 알렸으나, 결국 공사는 재개되고 말았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공사 재개를 권고하던 10월 20일 밀양 주민들은 오열했다. 그들의 눈물은 발전소 노동자들의 피폭 노동과 382만 부산울산경남 주민들의 방사능 공포와 초고압송전선로로 빼앗긴 삶의 권리와 값싼 심야전기로 심야 노동을 강요당하는 노동자들과 10만 년동안 보관해야 하는 사용후 핵연료로 떠넘겨지는 다음 세대에 대한 끔찍한 위험을 막아내고자 했던 몸부림이 얼마나 절실했던 것인가를 보여준다. 밀양은 탈핵탈송전탑을 위해 계속 싸울 수밖에 없다.







2017. 10. 26

국립재활원 HIV감염인 재활치료 거부

2017년 10월 26일 국립재활원에서 HIV감염인의 재활치료를 거부했다. 2월 기회질환을 앓고는 시각장애와 편마비가 생겼다. 7월 적극적인 재활치료를 위해 국립재활원에 문의했다. “역격리에 해당되는 질환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어 입원이 안된다”고 했다. 역격리는 환자의 면역력이 낮아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감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격리를 하는 것이다. 당시 입원해있던 종합병원에선 역격리 할 필요가 없어 다인실에 입원하여 하루 1회 재활치료를 했지만, 면역수치가 더 오르길 기다렸다. 10월 다시 문의하였으나 “감염내과전문의가 없어서 입원할 수 없다”고 했다. 그 논리대로라면 HIV감염인은 감염내과가 있는 종합병원에서만 치료가 가능하고, 요양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1차 병원 등에서는 불가하다. 이는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의학적 근거와도 맞지 않는다. ‘국가 유일의 중앙재활기관’이며 복지부 소속기관인 국립재활원의 행태는 HIV감염인의 치료받을 ‘권리’의 침해가 얼마나 만연하고 심각한지를 보여준다.





2017. 10. 26

\
문정현신부의 '반전평화새김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북한에 대한 강경발언을 앞세우고, 이에 질세라 북한에서도 미사일 발사를 하며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었다. 그런 가운데 11월 7일 트럼프의 한국 방문 소식에, 방문 일정 중 특히 빼앗긴 평택 대추리에 지어진 미군기지를 방문한다는 소식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10월 26일부터 11월 8일까지 문정현 신부가 제주 강정에서 서울 광화문 미 대사관 앞 광화문 광장으로 장소를 옮겨 평화를 새기는 서각기도를 이어갔다. 반전평화를 새기는 시간, 함께 평화를 바느질하고 평화를 노래하며 많은 이들이 그 곁을 함께 지켰다. 평택 대추리를 함께 지키던 농부들도, 거리에서 싸우는 노동자들도 함께 했다. 매일 저녁에는 평화의 촛불을 켜고, “No War! No Trump! No Nuke! Yes Peace!”를 함께 외쳤다.







2017. 10. 28

\
인권궐기대회 '인간답게 살아보자'

'이게 나라냐'라는 외침으로 촛불을 든지 1년이 지났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세상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대로인 '현실'이 존재했다. '나중에'라고 이야기하는 인권의 현실들, 혐오를 앞세운 정치는 여전히 무엇이 달라졌는지 보여주지 못했다. 인권운동+와 무지개행동, 빈곤사회연대, 공감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공감, 페미몬스터즈, 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공동주최로 촛불 1년 인권의 현실을 알리는 인권궐기대회를 진행하였다. 보신각에서 본 집회 후 광화문 광장까지 행진을 이어갔다. 인권궐기대회는 인권단체들이 처음 진행했던 공동집회로 인권현실을 알리고, 혐오와 차별없는 평등한 세상을 향한 발걸음을 내디는 계기가 되었다.





인간답게 살아보자!



촛불 1주년 - 인권 필기 대회
2017년 10월 28일 - 오후 4시 - 종로 보신각





2017. 11. 1

\
직장갑질119 출범

대통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했고, 노동부장관은 “부당노동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노동상담이 늘고, 노동조합 설립도 꾸준히 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의 직장인들은 회사의 갑질과 불합리한 관행에 숨이 막힌다. 직장갑질119 오픈채팅과 이메일로 들어오는 제보는 재난 수준이다.

직장갑질119는 그들에게 말을 건넨다. 당신의 직장은 어떠냐고. 당신의 이야기가 듣고 싶다고. 직장에서 겪는 갑질을 함께 해결해보자고 손을 내민다. ‘법률상담’이 아닌 ‘대화’를 권한 직장갑질119의 바람이 직장인들에게 닿았을까. 오늘도 카카오톡 오픈채팅과 이메일로 갑질 제보가 쏟아진다.







2017. 11. 4

\
퀴어 라이브 - 어디에나 있고, 어디든 잇는다.

“퀴어 라이브”는 성소수자가 어디에나 존재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함께 힘을 내며 살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생생한 현장이었다. 11월 4일 울산을 시작으로 광주(11월18일), 대전(11월24일), 춘천(11월25일) 지역에 공개적인 문화제와 간담회가 열렸다. 전국 총 51개 단체 및 모임들이 함께 했다. 지역 내 인권, 시민사회 단체, 정당들과 지역 내 성소수자 단체 및 모임이 퀴어라이브를 통해 한달 동안의 준비와 기획으로 퀴어라이브를 준비했다. 지역마다 차별과 불평등에 맞서 싸우고 있는 이들과 함께 연대하며 사회 변화를 요구하기 위한 자리였다. 성소수자와 성소수자의 인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모여, 성소수자 인권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드러내어, 지역에도 평등의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렸다. 퀴어라이브는 성소수자의 인권을 옹호하는 전국 행동으로 연대의 힘을 확인했고, 그 동안 성소수자 인권의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지역의 성소수자들에게 큰 힘을 얻는 자리가 되었다. 성소수자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든 잇는다. 퀴어력 뽐뽐!!







2017. 11. 8

차별금지법 전북공동행동 출범

2016년 하반기부터 2017년까지 거리의 촛불이 적폐청산을 외쳤다. 그러나 촛불 이후 인권과 민주주의의 변화는 차별·혐오 세력이 가로막히고 있다. 전북 지역 역시 다를 바 없다. 테러 예방 대회라는 명목으로 열린 종교 차별 선동 집회에서 격려사를 했던 정치인의 사례, 총선 기간 토론회에서 성소수자 인권을 반대하는 발언을 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각종 인권조례들의 가치를 훼손시키고 무력화시키려는 차별·혐오 선동 세력 등은 지역에서 빈번하게 진행되고 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 등을 감안하면 지역 사회내에서 평등을 위한 연대는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이에 전북지역에서도 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이 <차별금지법 제정과 혐오 없는 지역사회를 위한 전북공동행동(이하 차별금지법 전북공동행동)>을 결성하기로 했다.







2017. 11. 9

제주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끼임 사고

11월 9일(주)제이크레이션이라는 업체에서 현장실습 중이던 서귀포산업과학
고등학교 3학년 이○○씨가 업무 중 기계에 끼어 크게 다쳤다. 현장실습표준
협약서와 다른 근로계약서로 이중계약, 전공인 원예와 관련 없는 허울뿐인 실
습, 일일 7시간 현장실습 규정을 어긴 장시간 노동, 업체에 대한 학교의 현장방
문지도 부재 등 수년 전부터 되풀이된 현장실습생 사고의 배경이 여기도 똑같
았다. 그러나 사고 직후 업체는 사고가 노동자의 탓이었다고, 교육청은 업체의
책임이라고 발뺌하기 바빴다. 결국 열흘 뒤인 11월 19일 이○○씨는 결국 운명
했다. 11월 22일 현장실습 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가
꾸러져 유가족과 함께 진상 파악과 고인의 명예회복, 현장실습 실태 파악 및 개
선을 위해 싸우고 있다.







2017. 11. 10

\

아직 세월호에서 내리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

국회에서 ‘세월호 참사 피해자 증언대회’가 열렸다. 1부에서는 대한민국의 재난 피해자 지원 체계를 살펴본 후, 유가족과 생존자 가족이 자신들이 겪은 피해자 지원 실태를 증언했다. 2부에서는 국회에 개정안이 계류 중인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일명 ‘김관홍법’)의 문제점을 짚어보았으며, 피해자의 범위가 좁아서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증언이 이어졌다. 구조와 수습에 직접 참여한 민간잠수사와 진도어민, 세월호가 아닌 다른 이동수단으로 제주 출발 예정이었던 당시 단원과 교사가 어렵게 말문을 열었다. 현행 피해자지원특별법은 피해자의 범위를 넓히고, 피해자에 대한 의료 지원 및 심리치유 지원 기한을 없애는 등의 개정 과제를 안고 있다. 한편, 2017년 1월 12일에는 민간잠수사 사망의 책임을 동료 민간잠수사에게 전가한 검찰 기소에 대한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이 있었고, 6월 17일에는故 김관홍 잠수사의 1주기 추모문화제가 열려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7. 11. 14

\

'청소년과 기본소득 실험의 만남' 연구 결과 발표회

청소년의 삶에 기본소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올 한해 이 문제를 탐구한 인권교육센터 '들'의 연구발표회가 11월 14일 열렸다.

국내외 기본소득 사례를 검토하고, 청소년자립지원현장 실무자 및 청소년 당사자 인터뷰를 통해 '모두에게 조건 없는 현금 직접 지급'이 청소년인권의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청소년 대상 현금 지급을 떠올릴 때 마주하는 사회적 염려와 통념들을 어떻게 논파할 수 있을지를 모색하는 연구였다. 기존의 선별적이고 서비스 제공 중심의 지원 방식을 넘어서는 기본소득 논의가 '떨린' 존재 취급을 받아온 청소년의 정당한 자리를 찾는 과정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밝히고자 했다. 기본소득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청소년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사회적으로 의미 있게 들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017. 11. 18

마지막 미수습자 목포신항을 떠나다

세월호 참사 1313일. 세월호 참사 미수습자 남현철, 박영인, 양승진, 권재근, 권혁규 님의 가족들이 목포신항에서 합동 추모식을 치른 후 각자의 연고지로 떠났다. 9월 23일 조은화, 허다운, 10월 13일 이영숙, 11월 11일 고창석 님이 목포신항에서 영결식을 치르고 떠난 후 남은 마지막 미수습자 가족들이었다. 이틀 앞선 기자회견(12.16.)에서 미수습자 가족들은 “빠 조각 하나라도 찾아 따뜻한 곳으로 보내주고 싶다는 간절한 희망으로 여기까지 왔”지만 “이제 가족을 가슴에 묻기로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유품만으로 장례를 치러야 하는 가족들의 마음을 우롱했다. 추모식 하루 전인 17일 유해가 발견되었으나 해양수산부 현장수습본부가 사실을 숨긴 것이 뒤늦게 탄로 난 것. 2014년 11월에 그랬던 것처럼 미수습자 가족들을 포기시키는 데에만 여념이 없는 태도다. 재난참사에서 미수습자의 시신을 찾고 가족에게 인도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2017. 11. 20

반올림 10년, 우리는 아직도 거리에 있다.
삼성은 직업병 문제 해결하라!

2007년 3월 6일 스물 세 살의 황유미가 세상을 떠났다. 그녀의 삶을 집어삼킨 것은 백혈병이란 무서운 질병이었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며 입사한 삼성. 먼지 없는 방, 굴뚝 없는 공장, 청정산업이란 반도체 공장은 노동자들의 건강이 아닌 반도체 칩만을 위한 공장임이 밝혀졌다. 코를 찌르는 냄새, 알 수 없는 화학물질,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안전수칙도 설명 받지 못한 채 일했다. 삼성의 무책임한 안전대책은 결국 노동자들에게 무서운 질병으로 되돌아왔다. 고 황유미 뿐 아니었다. 지난 10년 동안 320명의 노동자가 직업병으로 제보해왔고, 118명의 노동자들이 세상을 떠났다. 삼성은 직업병 문제를 개인의 질병이라 이야기 하며 자신들의 업무와 무관하다 했다. 시간이 지난 뒤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에서 산재가 인정되었지만 삼성은 여전히 직업병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법원은 '노동자들의 알권리가 기업의 영업비밀보다 우선한다'며 영업비밀보다 노동자의 삶이 우선임을 판결했다. 정부기관이 인정하고, 사회적으로 주목하고 있다. 이제 삼성만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면 된다. 10년이 지났다. 삼성은 더 이상 노동자들의 죽음을 외면하자 말라! 삼성은 반올림과 대화하라! 우리는 아직도 거리에서 외치고 있다. 동자들의 고통과 죽음을 멈출 수 있도록 삼성은 직업병 문제 해결하라!







2017. 11. 21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시민평화법정 준비위원회 출범

문재인 대통령은 베트남에 '마음의 빛'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베트남에 가장 많은 군인을 보낸 나라였다. 왜 한국 군인들을 베트남에 가서 전쟁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만 여명의 민간인들을 학살했던 것일까? '마음의 빛'에는 진실이 담겨있지 않다. 우리가 일본을 향해 이야기하는, 그리고 제주 4·3과 80년 5월 광주 앞에서 되새기는 책임도 존재하지 않는다.

2000년대를 전후로 활발했던 '미안해요 베트남' 운동은 이제 진실과 책임을 묻고자 한다. 2018년 4월, 가해국의 수도 서울에서 시민들의 힘으로 대한민국의 학살책임을 묻는 법정을 세우는 것이 하나의 시작이다. 30여명의 활동가, 법률가, 연구자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있다. 시민평화법정은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한 법정이 아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진실을 더듬기 위한 법정이다. 베트남에서 오실 학살 피해자들의 '왜 나를 쏘았나요?'라는 질문을. 50년 전 태극기를 달고 베트남에 갔던, 이제는 노인이 된 청년들이 비로소 자신의 목소리로 그 날의 기억을 꺼낼 수 있는 장소.

2018년 4월 시민평화법정이 그러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2017. 11. 21

\

노동할 수 없는 인간은 없다.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하라!

"노동할 수 없는 인간은 없다. '생산적인 노동', '효율적인 노동'을 정의하는 사회가 있을 뿐이다."

11월 21일 중증장애인과 중증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 100여 명이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서울지사를 점거하고 "중증장애인 노동권 3대 정책"을 요구하는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국가는 여전히 장애인의 61.5%를 구직 의사도 없고 일할 수도 없는 '비경제 활동인구'로 보고 있다. 그나마 고용된 중증장애인의 대부분은 '직업재활시설'에서 단순반복 생산직에 종사하고 있으며, 최저임금법 제7조에 의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이다. 일하는 중증장애인은 하루종일 노동해도 평균 월급 22만 원을 받는다.

중증장애인들의 일자리를 공공부문에서 만들고 그 고용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노동의 정의를 다시 정의하는 중증장애인들의 노동권 투쟁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







2017. 11. 23

\

나를 위한, 모두를 위한 2017 대학입시거부선언

11월 16일로 예정되었던 수능이 포함 지진으로 인해 한 주 연기되었다. 이에 투명가방끈 역시 16일로 예정했던 선언을 한 주 미루어 23일에 진행했다. 예상치 못한 천재지변은 입시경쟁이 전제하고 있는 ‘단 하나의 공정한 시험’이 불안하고 불가능한 것임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투명가방끈이 다섯 해째 이어가고 있는 대학입시거부선언에는 입시와 경쟁에 대한 이와 같은 환상을 걷어내자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2017 대학입시거부선언에는 총 11명의 선언자가 참여해 입시경쟁교육 반대, 제대로 된 교육권 보장, 대학이 진정한 ‘선택’이 되는 사회, 학력학벌과 무관하게 있는 그대로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는 사회 등을 요구하며 기자회견과 캠페인을 진행했다. 올해의 선언 슬로건은 ‘나를 위한, 모두를 위한’이었다. 대학입시거부선언은 선언자 개개인이 스스로를 위해 입시경쟁과 학력학벌차별, 대학중심의 사회를 거부하는 행동이지만, 동시에 그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2017. 11. 24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루 뒤인 11월 25일 광화문 세월호광장에서는 ‘국민보고대회’가 열렸다. 9월 28일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두달여 기간 동안 국내외 100여개 지역에서 집중 서명과 피켓팅, 촛불 집회 등이 열렸고 11월 18일에는 광화문에서 국회로 행진하여 범국민대회에 참여하기도 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국회의원의 대답을 듣기 위해 국회에 상주하다시피 했고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는 국회 본청 앞에서 노숙농성을 하기도 했다. 박근혜 정권의 방해와 공작으로 해체된 특별조사위원회를 부활시키고 세월호 참사와 가슴기 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법안이 발의한 지 1년이 넘어 겨우 제정되었다. 진상 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다시 큰 걸음을 내딛어야 할 때다. 한편, 4.16재단 설립 추진대회가 11월 4일 열렸다. 세월호 참사 이후의 다른 사회를 열어가기 위해 함께 아파했고 걸어왔던 모든 이들과 창립을 준비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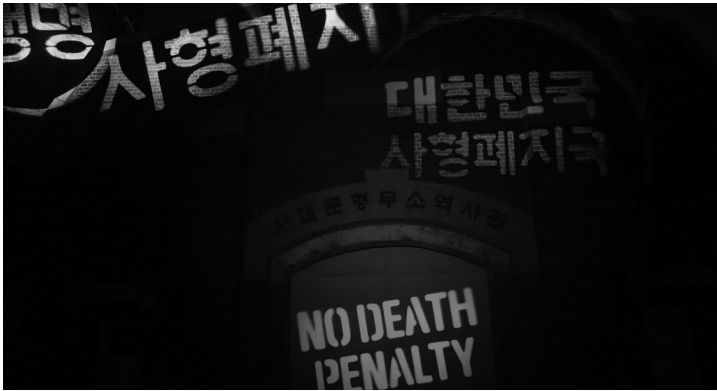


2017. 11. 30

대한민국 사형집행중단 20년

2017년 대한민국에서 사형집행이 중단 된지 20년을 맞이하여, 10월 10일 세계사형폐지의 날 기념식이 국회에서 진행되었다. 인권활동가를 비롯하여, 종교인, 국회의원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진행된 기념식에서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기국회 때 까지 사형폐지 특별법을 180명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 하는 법안을 꼭 제출을 약속하기도 했다. 11월 2일에는 사형집행 중단 20년 기념, 사형폐지 세미나콘서트를, 11월 30일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세계사형반대의날 Cities For Life(시티스포라이프) 조명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사형집행중단 20년이 되는 올해, 사형제도를 꼭 폐지하여 인권과 평화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며 종교, 인권, 시민사회가 함께 마음을 모았다.







함께만든사람들

2017 아텍스 저항행동, 4.16연대, 우리일터새로고침대행진준비위원회,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공권력감시대응팀, 광주인권지기 활짝, 국가인권위제자리찾기 공동행동, 국제민주연대, 꿀잠꾸러기,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 다산인권센터,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시민참여팀,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백남기 투쟁본부, 범페미니네트워크,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평화법정, 부산퀴어문화축제 기획단,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드배치반대전국행동, 사회진보연대, 산업체파견현장실습중단과 청소년노동인권실현 대책회의,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사회연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소수자 군인 처벌 중단,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시민사회 연석회의, 세월호희생자김초원이지혜선생님손익인정대책위원회, 손잡고, 손잡고운영위원회 진상조사 소위원회, 연분홍치마,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원불교인권위,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유성범대위,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전 코권 활동가(가원,승기,유현,준태) 및 48개의 인권단체와 458명의 개인 및 인권활동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퀴어모여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정치개혁수원시민행동, 제주퀴어문화축제, 제주해군기지반대대책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직장갑질119,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 전북공동행동,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인권연대추진단, 청소년활동기상청 활기, 촛불청소년인권법 제정연대, 최저임금 만원, 비정규직 철폐 공동행동(만원행동),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풀’, 퀴어여성네트워크,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홀리스행동

